

기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다.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서 자본주의 산업문명 속의 기술 중심적 환경주의(Techno-centric Environmentalism)를 들 수 있다. 이 견해는 환경 재난을 문제로 파악하지만 구조적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성장을 지속하되 환경경영 등에 의거하여 자연에 효율적으로 접근하면서, 오염과 공해 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문제를 처리하고자 한다.

마르크스 환경주의(Marxist Environmentalism)는 문제의 씨앗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있다고 비판하면서, 사회주의 생산양식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토지를 비롯한 생산수단의 공유와 자연 친화적인 집단적 계획 경제에 의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입장에서는 자연 및 자연적 존재에 대한 생명윤리도 불필요하고 또한 심층 생태주의나 생태 여성주의가 보이는 자연의 신비화도 배척된다.⁴⁾

문제를 위기로 인식하는 근본적 입장의 생태주의(Ecologism)는 초기 급진적 트로이카에서 다소 확장되고 있다. 심층 생태주의(Deep Ecology)는 인간 중심의 지배적 세계관을 원인으로 간주하여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생명 중심적 평등주의에 의거하여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묶는 큰자기 실현을 기초 규범으로 제시하면서 생명 일반에 대한 존중으로 이행한다.⁵⁾

사회 생태주의(Social Ecology)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기보다 인간 사회구조 내에서 문제가 비롯되었다고 여긴다. 사회의 층층이하 계층화 및 지배 구조가 문제의 당사자라고 여긴다.⁶⁾ 그래서 변증법적 자연주의에 의거해서, 야생 자연과 자연 억압적 문명을 거쳐, 자연-사회의 연속체인 제3의 자연을 추구한다. 그러면서 국가 중앙 집권주의를 청산하고 자율적 지역 자치주의를 시행하는 생태 아나키즘 사회를 꿈꾼다.

생태 여성주의(Eco-feminism) 역시 문제의 뿌리를 인간 사회 내에서 찾는다. 남성에 의한 여성 억압 구조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로 확산되어서 인간에 의한 자연 억압 양태인 환경 문제를 초래했다고 본다.⁷⁾ 따라서 가부장적 구조를 청산하는 선상에서 자연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나가야 한다고 여긴다. 이성을 격하시키고 감성과 영성을 내세우면서 자연 보전의 핵심 역할을 여성이 앞장서서 수행해야 한다고 자임하는 문화적 생태 여성주의 입장이 있고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자격에 의해 문제를 풀고자 하는 사회적 생태 여성주의 입장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리고 1980년대 들어서서 새로운 환경운동이 전개되었다.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운동이 그것이다. 환경정의는 인간의 문화적 필요에 따라서 자연을 이용할 때 획득

4) D. Pepper, *Eco-socialism* (London: Routledge, 1993), p. 232.

5) B. Devall & G. Sessions, *Deep Ecology* (Salt Lake City: Peregrine Smith Books, 1985), pp. 66-67.

6) 머레이 북친, 박홍규(역), 『사회생태주의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8), 77쪽.

7) K. J. Warren, "Feminism and Ecology: Making Connections," *Environmental Ethics* 9 (1987), p. 18.

하게 되는 혜택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도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정의로운 결과로 분배하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덤터기로 전가되는 오염과 공해 요인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자연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 결과 자연보호에도 성공을 거두고자 한다.⁸⁾

3. 환경 이념과 지속 가능성

1992년 이후 지속 가능한 발전은 핵심 화두로 제안되었다. 이에 환경 이념을 지속 가능성과 결부지어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보수적 환경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연보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기본 축이 발전에 놓여 있고 지속 가능성은 필연적으로 들러리 개념으로 전락되기 때문이다. 물론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정도에 있어서 훨씬 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보수적 환경주의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

넓은 의미의 진보적 생태주의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심층 생태주의와 일부 생태 여성주의는 자연 중심성으로 치우쳐 있어서 실천적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결함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다분히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다.⁹⁾ 인간의 문명적 발전과 자연적 지속 가능성은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지면서, 최대한 자연의 영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

이에 반해 사회 생태주의와 환경정의는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에 가장 다가가 있다. 원론적으로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자연으로부터 산물을 얻는 문화 형성이 요구되지만, 실제로 그 문화는 자연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주문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입장은 다소 인간 사회에 주안점을 두게 되거나 인간 중심성으로 치우쳐 있어서 자연보호에 성공적으로 다가갈 수 있겠느냐는 다소의 의구심이 들 수 있다. 그런데 고무적이게도 최근 들어서서 심층 생태주의의 안 네스(Arne Naess)는 조심스럽게 좁은 의미의 지속 가능성을 비판하면서도 전 지구적 규모의 넓은 의미의 지속 가능성을 생태 중심적인 것으로서 제안하고 있다.¹⁰⁾ 그렇다면 진보적 생태주의의 공통 분모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필자가 발전시키고자 하는 생태정의(Eco-justice)는 그런 것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생태정의는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를 새롭게 창출하고자 한다. 인류는 자신의 공동

8) 한면희 외, "환경정의와 NGO 운동," 『교보교육문화논총』 3집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2002), 566쪽.

9) D. Worster, "The Shaky Ground of Sustainability," in G. Sessions(ed.), *Deep Ecology for the 21st Century* (Boston: Shambhala, 1995), p. 425; W. Sacks, "Global Ecology and the Shadow of 'Development'," in G. Sessions(ed.), *Deep Ecology for the 21st Century*, p. 434.

10) A. Naess, "Politics and the Ecological Crisis: An Introductory Note," in G. Sessions(ed.), *Deep Ecology for the 21st Century*, p. 447.

체가 기반을 두고 있는 고유 생태계의 생명부양 역력을 한계치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문화를 구축하고 살아가는 자연-사회 연속체를 지향하되, 인간의 생리적 필요에 따른 삶의 질이 알맞게 유지되면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응분의 공정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한다. 이것은 생태적으로 건전한 이상과 정의의 정신이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선상에서 지구촌 각 문화가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도록 보호하고, 구성원의 자율 속에서 형성된 각 문화적 산물이 서로 호혜적으로 교환되는 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4. 한국 환경 NGO의 전략과 과제

한국 환경운동은 환경 문제와 관련된 복합적 상황을 제대로 풀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적 문제 인식과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속 좁은 환경주의를 넘어서서 넓은 의미의 생태주의를 지향한다면, 다양한 이념에 바탕을 둔 환경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어떤 생태제도 항상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생물 종의 다양성을 구현해야 하듯이, 지구상의 문화도 다양성을 실현함으로써 자율성을 구가할 뿐 아니라 있을 수 있는 단일화된 문명 권력의 폐해도 최소화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보편적 목표 성취에 노력하는 한, 환경운동의 다양성도 요구된다. 즉 효과적으로 운동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환경 NGO가 창립 이념을 토대로 특성화된 운동을 펼침으로써 시민의 동참을 이끌어내고,11) 그런 민중의 힘을 바탕으로 사회 지평을 새롭게 조성하는 주역으로 등장해야 한다. 이것은 고유 이념에 바탕을 둔 운동의 다변화와 그에 따른 시민 역량의 집결과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둘째, 한국의 환경 NGO는 구현하고자 하는 이념과 직결된 환경 파괴 사안에 대해 현장서 적극 대처하여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는 현장성 운동을 강화해야 한다. 현장성 운동은 NGO의 시민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이고, 이는 NGO 역량 강화로 귀결되어서 운동의 목표 실현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시민에 바탕을 둔 진정한 시민 NGO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무모한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는 개발 현장서 사태를 적극 수습할 것이 언제나 요구되지만, 사태가 진척되기 전 단계에서 정책적으로 부당한 개발을 막을 사전예방 정책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환경적으로 우려되는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하는 정보력을 지녀야 한다. 제도적으로 일정한 정도 이상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여건을 잘 활용하여, 사안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처하는 정보화 운동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법과 제도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환경 관련 법률은 물론 헌법의 환경권 조항도 보다 자연 친화적인 내용으로 개정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 법과

11) 한면희, "환경운동의 이념과 한국 환경 NGO 평가," 『환경과 생명』 29 (2001 가을), 27-44쪽 참조할 것.

제도가 제대로 정비될 때, 그것에 반하는 정책이 입안되어서 집행되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다. 다만 보수적 풍토 속에서 법과 제도 개선은 사회 여론이 강하게 조성될 경우에만 시행될 수 있으므로, 각 환경 NGO는 서로 연대하여 시민 사회의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자연 친화적 법 개정과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환경 현장 개입과 정책 전화, 그리고 법·제도 개선은 여론의 힘을 얻어야 환경 NGO의 목표가 관철될 수 있는 만큼 여론 매체를 자연 친화적으로 유도하는 전략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바른 정책으로 인도하기 위한 대 정부 및 의회 로비도 같은 선상에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시민에게 사안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며, 지원을 얻어서 문제를 푸는 선상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여섯째, 생태윤리적으로 부당한 정책과 개발로 인해 사회적 및 자연적 약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즉 생태 부정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로서 피해의 상관관계 규명과 이를 토대로 한 공익소송, 그리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절차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기화로 기업의 무모한 환경 파괴 행위에 대해 쟁기를 박고, 규범적으로 그릇된 정책이 발을 붙일 수 없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이제는 앞서 언급된 나라 안의 운동 이념과 전략을 토대로 나라 바깥의 환경 NGO와 연대하여 지구촌 문제를 함께 푸는 연대 전략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요하네스버그 2002지속가능발전지구회의에서 겪었던, 지구촌 환경 문제는 연관된 문제 선상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해법도 연대 선상에서 풀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역량을 갖춘 한국의 NGO는 자신의 이념에 바탕을 둔 형태로 국제 NGO와 연대하고, 필요할 경우 한국 NGO간의 공조를 통해 나라간 연대를 도모한다. 먼저 국제사회에 임하는 한국 정부의 변화를 도모토록 하고, UN 차원에서 주요 선진국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며, 최종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꼬를 생태적으로 건전한 방향을 전환토록 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상은 지속 가능한 문화를 재구축하기 위해 한국의 각 환경 NGO가 고유한 생태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스스로의 역량을 높이고, 필요에 따라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되, 나라 안은 물론 나라 밖까지 포괄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함을 뜻한다.

5. 노무현 정부와 환경 NGO의 과제

노무현 정부는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힘입어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등장 과정에서 보여준 도덕성은 해방 이후 권력의 혹처럼 달라붙던 권모술수와 정경 및 권언 유착을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 주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 개혁을 토대로 사회적 약자도 사회에 기대어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경제적 토양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 거는 기대 가운데 상당 부분은 한국 사회의 건강한 NGO가 추구하던 것과

내용적으로 일치한다. 즉 노무현 정부의 사회 개혁 내용과 한국 NGO의 추구 내용이 부분적으로 중첩관계에 있다. 따라서 중첩된 사안에 관해서는, 과정상에서 정부는 정부대로 NGO는 NGO대로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을 수행하는 데 노력하면, 결과적으로 공동의 목표인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노무현 정부가 갖는 취약점도 존재한다. 그것은 노무현 진영 안팎의 문제 상황과 나라 안팎의 문제로 대별할 수 있다. 노무현 진영 바깥의 문제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자신들의 배타적 이익을 피하던 정치세력이 수구적 기조를 유지하는 선상에서 완강히 개혁에 저항할 것이라는 점이 최대 장애 요인이다. 이는 자발적 정치 개혁의 여건을 조성하고 그리고 국민과의 대화를 통한 정치 지평 속의 국민 참여 방식으로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게 되겠지만, 정책 내용과 정치력의 정도에 따라 그 결과의 승패가 드러날 것이다.

주된 문제는 노무현 진영 안으로 모아진다. 바깥 개혁의 성공적 돌파 여부는 진영 안의 전문가 집단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듯이 새로운 판을 짜야 하는데, 그것은 진영 안의 전문가가 정치권 및 관료, 경제계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세심하고 분별력 있게 그리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그 진영 안에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마인드와 이론을 갖춘 전문가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그러나 그 상당수가 현장 경험이 적다는 데 문제의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의 교육 개혁 실패 사례로 유추해볼 수 있다. 이해찬 전 장관이 임시적 수선이 아닌 획기적이고 전반적인 개혁으로 수술을하기로 결정한 것은 옳았다. 문제는 교육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잘못 설정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킨 데 있다. 주된 이유는 개혁적 교육 정책 이론이 현장성에 바탕을 두지 못했던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론이 결여된 현장성은 공허하고, 현장성이 결여된 정책 이론 또한 현실 부적합으로 인해 표류할 수 있다. 수평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다소 다른 점이 있지만, 자칫 현장성을 풍부하게 갖추지 못한 이론의 도식적 적용은 예기치 않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진보적이면서 현장성을 겸비한 이론 전문가를 바깥에서 널리 구하여 넓은 의미의 개혁 집단을 형성하고 그리고 함께 문제를 푸는 것도 한 방도일 수 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과거 어떤 정부와도 마찬가지로 나라 바깥의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싫든 좋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 속에 놓여 있으면서, 대외 관계를 설정하고, 그 제약 범위 안에서 나라 살림을 꾸리게 된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내용과 형식은 개혁적 노무현 진영의 그것과 상당 부분 상충될 수밖에 없다. 바깥 세계와 단절되지 않으면서 내부를 개혁하고, 그런 선에서 바깥 세계도 점차 바꾸는 전략은 어려운 곡예와 같을 것이다.

이제 노무현 정부의 사회 일반적 개혁과 맞물리는 선상에서 환경 관련 정책에 대한 예측과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단하고자 한다.

첫째, 노무현 정부가 일반적 사회 개혁에 신는 힘의 정도에 비추어볼 때 환경 문제는 번두리 문제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환경 정책이 정치적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표류하기 십상일 것이다. 한 예로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수혜 정도를 높이는 과정

에서 환경 문제 해결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정부는 바람직한 사회로 가는데 필요한 사회 개혁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측된다. 달리 표현하면 사회적 약자도 덜 힘들고 중산층도 안정적인, 그러면서 서로 기대어 사는 사회의 색깔을 빚어낼 것이다. 그것은 정치 개혁과 재벌 중심의 경제 개혁, 참여 복지로 표현된 국가 일반복지 확충, 사회적 약자 차별 불식, 그리고 남북문제의 원활한 해결 등을 목표로 할 것이다. 이런 형태의 총체적 사회 개혁 조치는 사회 구성원 각자가 형평에 따라 응분의 대우를 받고 살아야 하는 사회정의 관점에서 볼 때, 대체로 옳고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정치경제에 초점을 맞춘 사회정의 접근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생태적으로 건전한 문화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회도 자연적으로 지속될 수 없음을 오늘의 환경 위기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 정부에서는 생태적으로 건전한 정책 수행 의지를 엿볼 수 없다. 노 당선자도 그렇고 또 함께 하는 전문가 집단도 대체로 자연 친화적인 환경철학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아니 환경 마인드가 거의 없다고 보인다. 이것은 선거 때 제시한 정책 공약집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환경 공약은 20대 정책 목표의 단지 한 항목인 13번째 「수준 높은 삶의 질」 항목에서 “최상의 복지·쾌적한 환경·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는 행복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로 나타나 있다.¹²⁾ 양적으로만 본다면, 20개 가운데 하나, 그 하나 속의 3분의 1의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풀어 펼치면 60개 가운데 하나의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 셈이다. 또한 당선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언론을 통해 공개한 10대 공약에서도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안에 작게 축소되어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인수위원회는 전국민복지 개선을 뜻하는 참여복지와 같은 주제에 주안점을 두되, 환경 문제는 그 안의 작은 항목으로만 다룰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약집 안에 상세 풀이한 핵심 전략에서 “후손을 위한 아름다운 녹색나라”로 다소 구체화하고 있지만, 그것 역시 철학 부재로 필관성을 결여한 채 좋은 것 여러 가지를 나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다.¹³⁾

둘째, 노무현 정부는 싫든 좋든 지구촌에 확산되어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여건 속에서 일정한 선택적 제약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여건이 노 정부의 정책 마인드의 핵심을 이루는 사안인 국민적 복지 확충과 상충적으로 맞물리면서 사태 해결의 돌파구로 경제 성장과 약자를 위한 정의적 분배라는 전형적 방법에서 찾게 될 것인데, 이것 역시 환경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실 이 점에 관한 한, 환경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는 녹색주의자도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기 어렵다.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에 편입된 한국의 기업과 정부가 개발에 따른 이윤 창출과 성장 정책을 펼치게 될 것인 만큼, 녹색주의자는 생태윤리적 관점에서 부당한 개발과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제해야 할 사명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개

12) 새천년민주당 정책선거특별본부,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후보 노무현」 참조.

13) 위의 책, 236-47쪽.

선과 실업 해소를 위한 성장에 대해 외면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생태주의자가 어쩔 수 없이 당면하는 이런 딜레마 상황을 현실적으로 푸는 해법은 신중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단 녹색 근본주의자의 입장은 막무가네 전법을 구사하는 것이다. 모든 형태의 개발에 대해 무조건 불가하다고 완강하게 저항하는 방법이다. 이미 자연 이용의 정도가 한계를 넘어섰고 지구촌 생태계가 생명부양 여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방법 구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필자 또한 이 방법 구사에 대해 다소 수긍하고 이해한다. 그러나 이런 전략을 보편화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첫째, 이런 접근은 자연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일 수는 있어도, 현실 운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 무책임할 수 있다. 둘째, 이런 접근은 빈곤과 환경상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의 실현과 동료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유지에 대해 외면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에 대해 환경 NGO는 어떤 노선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안이 있다. 정의의 눈으로 사회 현실을 직시하고 다가가면서 생태계 문제를 해결하는 신중한 접근이 요청된다. 정의적 접근으로 한국 사회의 다른 사회단체와 연대를 도모하고 그리고 환경적 접근으로 환경 NGO의 고유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노무현 후보 공약집에 환경 부문 핵심전략으로 “환경정의 실현”이 기록되어 있다.¹⁴⁾ 문제에 대한 구체적 인식 부족으로 선언만 된 채 일반 환경 공약에 용해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을 잘 다듬어서 향후 환경정책의 철학으로 삼는다면 다른 부분을 아우르는 사회정의 접근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환경 문제를 바르게 풀 수 있을 것이다.

이제 NGO의 핵심 과제의 하나는 환경정의에 의거하여 한국 및 국제 사회를 이 방향으로 이끄는 데 있다. 그러려면 원칙적 기준과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한편으로 종 다양성의 유지를 포함하는 자연환경 보전과 또 다른 한편으로 자연 이용에 따른 사회적 혜택 및 부담의 정의로운 분배를 中庸의 道로 추구하는 것이다. 즉 “生態적으로 持續 가능하면서 正義로운 社會”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환경정의 (보다 근본적으로 생태정의) 해법으로 한반도 지역 생태계든 지구 생물권이든 문제 상황에 다가가도록 한다. 기초 단위 생태계와 나라 단위의 복합 생태계, 그리고 지구 생태계의 3단계로 분류해보자. 이 나라 각 지역은 지역 생태계의 생명부양 여력의 한계 안에서만 개발을 수행하고, 자연 이용에 따른 혜택과 오염으로 인한 부담을 공정하게 짊어지고 정의롭게 나눈다. 물론 여기서의 개발은 생태경제학이 얘기하는 질적인 경제적 성숙을 뜻하는 것으로서 양적 성장은 아니다. 따라서 생태정의 사회의 경제는 성장 없는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¹⁵⁾ 여하튼 이런 기초 단위 생태정의 사회가

14) 위의 책, 236쪽.

15) 다음을 볼 것. H. E. Daly, "Sustainable Development: An Impossibility Theorem," in H. E. Daly et al (eds.), Valuing the Earth: Economy, Ecology, Ethic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93), pp. 267-68.

연합하여 국가 단위 생태정의 사회를 구축하고, 이런 국가간의 연합을 토대로 지구촌 정의 사회가 구성되도록 한다.

이런 생태정의 사회 구축을 목표로 할 경우, 비록 한계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해야 할 일은 명확해진다. 먼저 바깥으로 눈을 돌려 지구촌 생태정의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범녹색주의자의 강고한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의 주요 NGO가 주안점을 두어야 할 사항이다. 이것은 세계적 경제 성장에 대한 생태주의적 제어(ecological control)의 일종으로서 한국 NGO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바깥 주저앉힘 전략이다.

그리고 이어서 국제적 녹색 연대를 통한 외부 주저앉힘이 실효를 보는 선상에서 내부 제어의 수위를 조절하는 주저앉힘의 전략을 병행한다. 물론 역 방향도 가능하다. 어느 경우든 국내 경제가 질적 완성을 향한 발전의 영역에만 머무르고 생태계의 한계치 이상으로 부하를 주는 양적 성장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한다. 그 이념과 내용, 방법과 기술은 생태철학과 생태윤리, 생태사회경제의 해법으로 다가가되, 자연 친화적 과학기술에 의거한다. 물론 절차에 있어서 민주적으로 공정하고, 분배 결과에 있어서 정의로운 접근은 일관되게 견지한다.

바로 이런 생태정의 사회 접근은 노무현 정부의 강점인 사회정의의 마인드에 동참하면서, 그 취약점인 생태주의로의 인도에 성공을 거둘 수 있는 해법이라고 보인다. 다만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안팎의 이중적 제어(주저앉힘) 전략과 생태적으로 건전한 성장 없는 발전, 그리고 정의 실현을 통해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6. 환경정의시민연대의 입장과 역할, 향후 과제

환경정의시민연대는 마침 2002년이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여서, 단체 이름에 맞는 이념을 구체화하기로 했고, 그에 따라 이념과 실천 강령을 정비했다. 물론 이상적일 수 있지만, 최대의 이념 및 실천 강령에 준하는 선상에서 향후 보다 특성화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이념

환경정의시민연대는 지구 생태계와 한반도가 처한 환경 위기가 지배와 억압의 세계관과 가치관, 성장 중심의 문명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식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정의를 실현하는 데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

2. 강령

1) 환경정의시민연대는 모든 생명의 터전으로서 지구 생태계가 갖는 고유한 가치를 인식하고, 지구 생명부양체계가 건강하게 유지되어 생물종의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하며, 인간의

문화가 자연 친화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환경정의시민연대는 자연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문화적 필요 영역에서 그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고 또한 이용 과정에서 수반되는 환경적 불이익과 책임 역시 윤리적으로 부당하지 않게 분배되도록 함으로써 환경정의를 구현하도록 노력한다.

3) 환경정의시민연대는 토지와 자연 자원의 이용 과정에서 현세대 사회적·지역적·생물학적 약자가 입게 될 피해에 대해 응분의 보상과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울어진 정의의 추가 원상으로 회복되도록 노력한다.

4) 환경정의시민연대는 현세대 아동과 미래세대가 부당한 건강상의 피해를 입지 않음은 물론 알맞은 자원의 필요 여력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세대간 환경정의를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5) 환경정의시민연대는 푸른 하늘과 생명의 땅, 맑은 물을 해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 싸우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정의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한다.

6) 환경정의시민연대는 환경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필요를 위한 생태학적 실천뿐만 아니라 지배적 세계관과 가치관의 전환과 생활양식의 변혁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노력한다.

7) 환경정의시민연대는 자녀를 대하는 어머니와 같은 자세로 자연에 대한 모성애적 배려와 존중의 태도로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한다.

한국의 한 환경 NGO인 환경정의시민연대는 환경운동의 이념으로서 환경정의를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것은 생태적으로 건전하면서 지속 가능한 정의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에 국내에서는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서 요구되는 사안에 적극 개입하여 목표하는 바를 실현하는 특성화된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다른 사회단체와 적극 연대하고자 한다. 환경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지 않지만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애쓰는 단체와는 정의 실현 차원에서 공조할 것이며, 다른 환경 단체와는 환경 문제 해결이라는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력할 것이다.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국제적으로 환경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단체와 연대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형성되는 강고한 환경정의적 힘을 바탕으로 국내 및 국제 환경 관련 정책과 제도에 맞서서, 한편으로 비판하고 다른 한편으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나라와 지구촌 사회가 자연 친화적 문명 사회로 이행토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특별히 노무현 정부가 다분히 정의적 분위기로 채색되어 있지만 환경마인드가 결여되어 있음을 중시하면서, 사회정의 실현과 환경 문제 해결, 그리고 자연 친화적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문명적 과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대의적 흐름에 뜻을 같이하는 어떤 단체와도 힘을 합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자 한다.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한반도 위기의 원인 및 해법

정대연 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

1. 미국의 세계 전략

1) 9.11 이전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

91년 12월 소련의 붕괴로 미소 냉전이 붕괴되었다. 미소 냉전의 붕괴는 미국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었다. 미국에 필적할 만한 적이 사라짐으로써 유일적 패권을 구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대사회주의 전선의 이완에 따른 다극화 현상은 미국중심의 패권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등장하였다.

탈냉전 직후 미국은 냉전 직후의 혼란상을 미국 중심의 질서로 재편하는 데 전력했다.

89년 5월 부시의 연설을 계기로 소련을 자본주의 체제내로 포섭하는 정책으로 선회하였고, 소련 사회주의 제도를 체계적으로 와해시켜 미국에 대적할 수 있는 잠재 역량을 파괴시켰다. 이 과정에서 소련내 친미파를 지원하고 전략 핵무기의 해외 유출을 통제하였다.

한편 탈냉전이라는 정치적 공백 상황을 이용하여 제 3세계에 통제를 강화하였다. 89년 12월 파나마 침공, 90년 2월 니카라과 선거 개입, 91년 1월 걸프전(걸프전의 원인은 복잡하지만 탈냉전 직후 정치적 역관계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점은 명확하다)

냉전 직후의 이러한 정책은 win-win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한반도와 중동에서 중간 규모의 두 개의 전쟁을 치른다는 미국의 정책은 91년 이라크전과 91년 봄 한반도 120일 전투 계획안에서 구체화되었지만 다행히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북미제네바 합의로 귀결되었다.

94년 하반기 미 백악관의 개입과 확산 정책 이래 미국의 패권전략은 동북아시아에서의 미일동맹의 강화-유럽에서의 나토확장정책을 핵으로 진행되었다. 95년 2월 동아시아태평양 안보보고서(EASR)에서는 주한미군 철수안을 백지화하고 미일 동맹을 기초로 전진배치한 10만명의 동북아 주둔군을 중심으로 미국의 권익을 배타적으로 옹호하겠다는 강성 기초의 정책을 채택한다. 이의 연장선에서 96년 4월 미일 신안보선언이 채택되고 일본의 군국주의화가 미국의 묵인 아래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99년 나토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를 나토에 편입하여 동진정책에 나섰다. 99년 3월에는 세르비아에 대한 폭격을 단행하였다. 세르비아 폭격은 첫째, 군사 개입의 주체가 UN이 아니라

나토라는 점 둘째. 러시아의 전통적인 이해 지역에 대한 군사 개입이었다는 점 셋째. 군사 개입의 근거가 인권 문제였다는 점에서 탈냉전 이후 미국의 일방주의가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었다. 이의 연장선하에서 99년 5월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나토 지역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개입을 할 수 있다는 신국방전략이 채택되기에 이른다.

이상과 같은 미국의 강성정책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 유럽에서 러시아의 안보 위기를 심화시켰고 중국의 군비확충과 중러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94년 11월 미 의회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하면서 미 정치계는 강경 기조로 선회하기 시작하였다.

공화당 주도의 의회는 북미 제네바 합의를 굴욕적인 양보라고 클린턴 행정부를 공격하며 국가미사일 방어망 계획(당시는 NMD)를 제안하였다. 98년 7.15 린스펠드가 주도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고 북의 금강리 위기를 계기로 99년 3월 NMD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9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공화당 주도의 강경 노선은 21세기 근본적인 군사 전략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2) 9.11 이후 노골화되는 미국의 군사주의적 패권전략

9.11 이전 부시 행정부의 세계 전략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광범위한 반대 여론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의 일극 패권주의를 경계하던 국제적인 흐름은 역설적으로 9.11 테러를 계기로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로 구체화하고 미국의 국내 환경을 초강경 보수 기조로 바꾸었으며 미국의 정책을 관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9.11 이전부터 추진하던 일련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9.11를 계기로 일정한 변화 양상도 보이고 있다.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21세기의 군사전략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21세기 미국이 유일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력의 질적 비약을 이룩하고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강국을 견제하며 지역분쟁을 통제하고 불량국가 및 소규모 테러 단체의 위협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를 위해 러시아의 전략핵무기를 제거하고 MD를 추진하며 대량살상무기를 선제 공격을 통해서라도 제거한다는 원칙을 채택한다. 이에 필요한 전력 所要는 기존의 WIN-WIN에서 WIN 플러스와 미 본토방위로 설정하였는데 동북아시아에서 중간 규모의 전쟁을 배제하는 대신 이 여력을 군사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정책이었다.

9.11 이후 미국은 미 본토 방위를 중시하고 테러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에 대한 공격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 국내에서는 이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 구금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과정에서는 노골적인 친 이스

라엘 정책을 취하는가 하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정치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는 등의 강경 기조의 정책을 천명하고 있다.

2001년 12월 ABM에서 일방 탈퇴하고 2002년 6월에는 러시아와의 전략무기 감축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국의 핵 패권 전략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체첸 반군에 대한 공격에 대해 묵인받고 여러 지역에서 경제적 이권을 챙기는 외교적 행보를 하고 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배경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초강경 유일 패권 전략은 2002년에 접어들면서 속속 현실화되고 있다.

2002년 1.8 핵태세보고서에서는 7개 국가를 핵 공격 대상으로 명기하고 전 세계 1만개의 지하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소형 핵폭탄 개발을 천명했으며 9월에는 기존의 억지와 봉쇄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던 핵 전략을 선제 공격전략으로 바꾸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수를 강행하고 있다.¹⁾

3) 초읽기에 들어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미국의 이라크 침공 계획은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석유 자원을 통제하려는 경제적 이해, 이른바 문명충돌론으로 포장된 이슬람 사회에 대한 적대적 기류, 테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강경 기조를 배경으로 아프칸 전쟁, 알-카에다 잔존 세력과의 전 세계적인 범위의 소규모 전쟁의 연장선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유일 패권전략의 산물이다. 미국의 대이라크 침공은 지난해 11월 미국이 제출한 대이라크 수경결의안이 유엔안보리를 통과하고,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군지원기들의 사우디 기지와 영공 사용을 보증함에 따라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표면상으로는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라크에 매장되어 있는 방대한 석유자원의 확보에 있다.²⁾ 그런만큼 무기사찰과 무장

1) 부시 행정부의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 전략은 2차대전 이후 상대방의 선제공격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명시하던 전략에서 벗어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에 의한 선제공격을 허용하는 새로운 군사전략이다. 이 전략은 미국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이러한 위험이 시간을 두고 확대, 증대되는 경우 해당국가를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전략'은 미국의 일방주의로 비판을 받았던 국제 조약의 탈퇴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미국에 불리한 국제기구와 조약에서는 탈퇴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탄도탄요격 미사일(ABM) 협정이 미사일방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방해했다며 조약 탈퇴를 정당화했으며 북한, 이라크, 이란 등의 대량파괴무기 획득을 막지 못한 비확산 조약의 위험성도 재차 경고했다. 또 미국의 반대 속에 출범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이 미국 시민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 이라크 석유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관심은 2001년에 발표된 [체니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체니 부통령은 석유 회사의 최고 경영자를 지낸 사람으로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듬었는데, 그 보고서는 "에너지 안보를 무역 정책과 대외 정책의 최우선 사항으로 삼을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현재 석유 생산은 30년전에 비해 39%나 줄었지만 앞으로 20년간 석유 소비는 33%나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 아래 장기 전략에 따른 석유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군사 작전을 포함해 이라크에 대해 즉각적인 정책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해제의 차원을 넘어 후세인정권의 붕괴를 목표로 하고 있다. IAEA의 무기사찰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까지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확증이 제출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미국 에너지 메이저의 힘은 군수산업과 함께 외교정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강하다.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9·11테러 직후 부시진영이 테러주모자로 오사마 빈 라덴을 지목하면서 전격 침공, 탈레반정권을 붕괴시켰다. 이 정권은 미국 석유회사가 매년 1억달러의 통과료를 제의하며 요구한 중앙아시아 석유·천연가스 송유관 통과를 반대했던 전력이다. 이어 출범한 카르자이정권이 미국에너지기업에 통로를 허용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라크문제도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지적했듯 핵심은 석유다.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걸프전 이후 석유개발권을 러시아 등에게 주었지만 미국회사는 배제했다. 세계2위 매장량을 지닌 이라크 석유개발권 문제가 21세기 에너지전략의 핵심이라고 여기는 부시진영은 후세인축출 외에 대안이 없다고 보고있다. 미국안팎에서 연일 반전시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부시진영은 개전택일문제에 골몰하고 있을 뿐이다.

2. 미국의 일방주의적 패권전략의 배경

1)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자본주의 위기

197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중심의 금융위기에다가 이라크전 위협에서 비롯되는 고유가, 첨예해지는 북미대결, 자본의 신흥시장 이탈, 중남미를 비롯한 제3세계 경제의 파산 등이 겹쳐 2003년 세계경제 전망도 어느 때보다 불투명하다. 자본의 과잉에 따른 이윤율의 저하에 부딪친 초국적 자본은 무차별적인 신자유주의 세계화전략으로 활로를 찾으려 해 왔으나 이는 개발도상국 나라 경제의 파탄과 금융투기자본의 약탈성으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붕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저항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의 가속화라는 거대한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구조적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97년 7월 태국에서 시작되어 동아시아를 휩쓴 금융 위기는 98년 8월 러시아로 전파되었고 그해 가을부터는 남미를 강타했다. 여전히 제3세계 전반이 9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융 위기의 연장선하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93년 이래 호황을 누려온 미국 경제는 2000년 3월을 정점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른바 '신경제'로 지칭되던 미국 경제 호황은 갈 곳을 잃은 금융 투기 자본, 과잉자본이 미국의 고달러 정책을 배경으로 하여 미국으로 몰려 들어 빚어 낸 일종의 거품이었음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미국으로의 막대한 자본 유입-주가 상승-주가 상승으로 자산가치가 늘어 난 미국 시

민들의 과잉 소비 - 내수 확장 - 호황으로 이어지는 상승 국면과 함께 달러가 20% 정도 고 평가되면서 수입물가의 하락으로 물가 상승 없는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기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산업에 집중 투자된 자본이 그에 걸맞는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했음이 확인되면서 2000년 3월을 정점으로 미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미국 유수 기업이 회계조작을 통해 이익을 과장했음이 드러나면서 미국 경제는 총체적인 위기 국면으로 빠져 들고 있다. (미국 기업의 비금융 기업의 시가 총액이 94년 48억불에서 2000년 3월 15조로 상승했다. 2000년 3.10 이후 주식 평가손이 7조달러에 달한다. 12.2 한겨레신문, 왈든 벨로의 칼럼에서)

현재는 미국이 더불답(이중 침체) 양상을 보이면서 디플레이션을 빠져 들 것이라는 전망과 주가 거품이 해소되어 회복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90년대 초반 거품 붕괴 이후 막대한 금융권의 부실 채권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발 공황 가능성이 회자되는 가운데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경제 또한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2) 미국중심의 일국주의 해체와 다극화의 심화

'대테러전'을 앞세운 미국의 일방주의적 패권정책은 냉전체제의 해체에 따른 미국중심의 일국적 패권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전략이다. 최근 유로화의 출범 등 다극화를 촉진하고 있는 유럽연합(EU)과 신흥 경제대국, 군사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21세기 안정적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미국의 패권주의 산물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일방의적 패권정책은 저항과 견제를 불러오면서 오히려 미국의 지배권을 해체하고 다극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중심의 일방주의적 정책을 반대하며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한 것과 독일, 프랑스 등이 미국이 추진한 UN의 대이라크 결의안에 대해 제동을 건 것 등은 미국중심의 패권주의가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2002년 1월 1일 유로화가 유럽 12개국에서 단일통화로 공식 통용되게 됨에 따라 현재 인구 3억 명, 세계총생산의 16%를 차지하는 세계 제2의 경제권이 실질적인 경제통합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유로화의 통용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유로화의 위상 강화와 달러 단극체제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다. 유로화가 통용되기 시작한 지난 한해 동안 달러대비 유로화 가격은 18% 상승하면서 성공적인 통용과 통화 강세를 보였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유럽·지중해 연안 10개국을 가입후보국으로 추천하는 등 동맹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폴란드가 5월 1일자로 유럽연합(EU)에 가입, 2007년 유로존 가입 예정이다. EU의 확대에는 대유럽경제권 구축이라는 목적이 깔려 있지만 미국의 일방주의와 패권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독자적이며 통합적인 지위와 능력을 갖추어나가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유로화의 출범과 유로존의 확대는 다른 측면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공동체 결성 움직임 등 지

역블록 구축 움직임을 촉진함으로써 세계시장의 재편을 둘러싼 제국주의 진영내부의 대립과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다.

유럽연합(EU)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의 대이라크 군사공격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힘으로써 미국의 패권적 전쟁정책에 제동을 걸어 왔다. 유엔 안보리의 대이라크 수정결의안 통과를 미국이 유엔의 통제없이 일방적으로 이라크를 공격하는 것을 저지한 측면과 함께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국제적으로 승인시켜 주는 양면성을 안고 갖고 있다.³⁾

유럽연합(EU)이 추진해 온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도 미국의 대북 강경분위기 견제 구실을 하고 있다. 유럽은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가 필요했고, 북한으로서도 유럽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대북 강경론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게 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인 것이다.⁴⁾

3)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반세계화, 반미반전 투쟁

부시정권의 일방주의적 패권정책은 무차별적인 신자유주의 세계화공세와 이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한 지배정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패권정책은 또 다른 저항을 낳고 있다.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에 대해 9.11 이후 영국 10만 규모의 반전 시위, 바르셀로나 유럽연합 정상회담 반전평화시위, 2002년 4월 워싱턴에서의 대규모 반전 시위, 6월 도쿄에서의 4만 반전, 유사입법저지 시위, 10월 베트남전 이후 최대인 샌프란시스코 8만, 워싱턴 13만 시위, 11월 유럽 100만명 시위 등 전세계적인 차원의 반전평화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미군철수를 강제했던 베트남 전쟁 당시의 반전평화 시위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대규모로 결집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와 주목을 모으고 있다.

98년부터 남미를 휩쓸고 있는 저항은 에콰도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에서 심각한 정정불안으로 비화되었고, 2002년에 접어들면서는 브라질, 우루과이,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에서 좌파 정권의 집권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동 전역을 휩쓸고 있는 이슬람 근본주의 물결은 미국식 세계화에 대한 적대감을 테러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퇴행적인 양태라고

3) 미국은 당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하고 안보리결의가 있건 없건 이라크를 공격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 등 전통의 맹방을 비롯해 91년 걸프전 때 흔쾌히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군에 참여했던 국가들이 이번에는 안보리 결의 없이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여기에다 미국 내에서도 안보리 결의와 동맹국들의 협력이 없는 일방주의적 군사행동은 반대한다는 여론이 점점 고조했다. 결국 미국은 이라크의 정권 교체라는 본심을 일단 뒤로하고 이라크에 대한 무기사찰과 이라크의 무장해제라는 목표를 내세워 유엔 결의를 이끌어낸다는 전술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날로 강화돼온 미국의 독주체제에 제동을 걸 기회만을 노리던 프랑스, 러시아, 중국은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국제안보와 질서를 혼자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보리 역할의 강화를 원했고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내놓은 이른바 '2단계 해법'은 이러한 희망의 결정판으로 풀이될 수 있다.

4) 최근 북한의 국제 거래에서의 유로화 사용선언도 이러한 맥락이다.

볼 수 있다.

미국은 베네주엘라의 차베스 정권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브라질 노동자당의 룰라는 외채 지불을 약속하는 한편 아르헨티나와 남미 공동시장 창설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알-카에다는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케냐 등에서 테러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 중 장기적으로 주목되는 것은 남미 좌파의 행보이고 단기적으로 이라크 전쟁의 결과이다.

3. 미국의 아시아 중시전략과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아시아 중시 전략은 부시 신국방정책(디펜스 리뷰)의 중요 내용이다. 부시정권은 9·11테러 사건 뒤에 연이어 발표한 '4개년 국방정책 검토'(QDR)⁵⁾와 '아시아 전략 2001~2002'⁶⁾은 군사전략의 초점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기고, 해외기지를 포함한 전방배치 전력의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신속배치 능력을 강화하며, 정보시스템의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전력의 기동성을 높이고 경량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시정권의 아시아 중시 전략은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아시아는 역동적인 경제 성장지역이고 지역 분쟁의 요소가 많은 점이 아시아 중시 정책의 근거라면 중국에 대한 원거리 포위망은 잠재적인 경쟁국 중국을 보다 공세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정책 기조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일 동맹을 미영 동맹 수준으로 격상시킬 것을 강조하고, 동북아시아 전진 배치된 주한미군을 괌, 오키나와 등지로 후방배치 하되 중국에 대한 포위망은 보다 강도높게 강화하는 새로운 기조가 구체화되었다. (일부에서 주한 미 지상군 철수안은 이러한 사정의 반영이다)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MD 계획에 지장을 초래하는 ABM 조약을 철폐시켜 MD 계획을 본격화하는 한편 러시아와의 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통해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를 제거하고, 이 여분을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 개발에 돌린다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1) 위협수준으로 치닫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군비경쟁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침략주의적 패권정책에 편승하여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도 날로

5) 2001년 9월에 발표된 4개년 국방정책 검토(QDR) 보고서는 벵갈만에서 동해에 이르는 동아시아 연안을 '도발지역'으로 규정하면서 미군기지 및 기반시설의 밀집도와 접근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접근성 확대, 기반시설 확충, 원거리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역내 지원시스템 개발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동아시아 중시전략과 중국 견제정책을 공식화하고 있다.

6) '아시아 전략 2001~2002 보고서'(2001.10.1)는 향후 10년내 미국이 전쟁에 빠질 위험성이 가장 큰 나라로 중국과 한국을 지목하고 있다. 또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 이득을 볼 것이라며 미군 철수 반대를 주장함으로써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패권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강화되고 있다. 고이즈미총리의 신사참배강행, 교과서왜곡, 괴선박침몰사건, 야스오관방장관의 핵보유시사발언, 일본자위대의 대아프칸전쟁지원, 일본자위대의 전쟁수행을 합법화하는 유사법제 추진, 미사일개발과 독자적 MD추진 등 2002년 한해동안 일본의 군국주의 움직임은 전방위적으로 강행되어 왔다. 유사법제와 헌법9조의 개정 움직임은 일본내부의 반대에 부딪혀 일단 유보되었으나, 미국의 대(對)이라크 공격에 대한 병참지원을 정당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 제정을 추진중이다.⁷⁾

일본의 군사력 증강도 위협수위를 넘은지 오래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2001년판 방위백서'⁸⁾에 따르면 일본은 '신 중기 방위력정비계획' 기간에 총 25조1600억엔(약 260조원)을 들여 항공기, 선박, 전차 등 각종 전투장비들을 신형으로 교체하고 자위대 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같은 거액을 투입하려면 일본은 매년 국방예산을 0.6%씩 늘려나야 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일본은 독자적인 MD 체계구축에 들어간 데 이어 중유공급기(4기), 고성능 무인정찰기 등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자위대의 해외진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자 특히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염두에 둔 조치이다.⁹⁾ 백서에 따르면 중국은 21세기 가상의 적으로 중국¹⁰⁾을 설정하고있는데 부시 정권 등장 이후 미·중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일·중간 군사적 대결색채가 짙어지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흐름이다.

2) 중국의 대응

중국 또한 미국이 군사력 우위를 앞세워 패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를 저지하기 위해 외교, 국방 등 다방면에 걸친 대응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특히 부시 미 대통령의 선제공격 위주의 국가안보전략에 경각심을 높이고 전방위적인 대응 태세에 들어갔다. 중국지도부는 미국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을 피하면서도 미국의 일방주의적 패권전략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 일환으로 중국은 유럽연합(EU)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의 일방적인 우세에 대한 평형추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면서도 일선에 나

7) 일본은 아프간 대(對)테러전을 위해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제정, 해상병참지원을 실시했으나 이 특별법은 미국 주도의 대이라크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뒷받침은 되지 못하고 있다.

8) 이번 백서는 지난해 12월 '신 중기 방위력정비계획' (2001~2005년)이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그 구체적 지향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시선을 모았다.

9) 일본의 군사력 확보 목적이 그야말로 '자위'에 국한된다면 이런 장비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중급유기 도입은 지난해 연립여당 내에서조차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았으나 정부와 자민당은 '국제공헌'을 명분으로 밀어붙였다.

10) 백서는 중국의 미사일 위협을 강조한데 이어 올해는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계획과 군사전략을 자세히 분석, 중국을 사실상 새로운 '가상적'으로 삼는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서지 않고 독일과 프랑스를 앞세우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미국의 대 이라크 무력사용에 대한 유엔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북미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표방하며 북한의 핵개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미국의 대북봉쇄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미국의 군사주의 노선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2년과 2003년 모두 17% 이상의 군사비 증액과 함께 미국이 더 이상 군사기술을 자국에 이전하지 않을 것에 대비, 이미 러시아로부터 첨단 무기류의 공급선을 확보했다.

미국의 일방주의적 패권정책과 중국의 대응은 특히 대만의 독립을 추진하고 MD체제로 편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부시정권의 대만정책과 '중화1국론'을 고수하려는 중국의 입장을 놓고 향후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3) 강화되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지배

부시정권의 신군사전략에 따라 한국에 대한 전력증강, 군사적 지배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한미연합사 산하에 TMD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면서 MD 관련 무기(패트리엇 미사일이나 XBR, 이지스함, 차세대구축함 사업인 KDX-III와 차기방공망 사업인 SAM-X사업 등)도입사업을 주도함으로써 한국을 MD체제로 편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심각한 것은 한때 이전 계획이 거론되었던 용산기지의 향후 활용계획을 비롯한 주한 미군 전력구조의 재편이다. 지난 3월말에 합의 서명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는 한미군사동맹을 '지역' 동맹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감시·정찰(C4ISR) 능력과 정밀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배가해, 주일미군과 함께 명실공히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용산기지와 관련해서 미국은 2008년까지 '동북아시아 시뮬레이션 센터(North Asia Regional Simulation Center)'를 만들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등 동북아 지역의 군사정보 수집 및 전략 수립, 그리고 전투력 투사 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예정이다.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가 한반도에서 동북아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의 우주 군사화 계획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위험한 것은 북을 핵선제공격 전략의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북의 지하 군사시설 파괴를 목표로 한 차세대 핵무기 개발을 권고하는 등 한반도 핵전쟁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방부와 에너지부가 작성한 HDBT보고서(지하목표물파괴보고서2001.10)는 재래식탄두로는 북, 이라크 등의 지하시설을 파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핵탄두의 장착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여 2002년 11월 17일 럼스펠드 장관은 "국가나 테러조직이 지하 깊숙이 감춰둔 대량살상무기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관통형 소형 핵폭탄 연구, 개발을 국방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4. 북미핵공방의 본질

1) 미국의 대북고립압살정책과 북한의 역공

최근 조성되고 있는 북미간 대결은 지난 5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전통적인 문제이고 지난 10여년간 전쟁을 방불케 하는 여러 차례의 격돌의 연장선 하에 있다.

이 각축의 본질은 이북의 대량살상무기를 제압하려는 미국의 요구와 미국의 핵 위협을 제거하려는 이북간의 대립이다. 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이북에 대한 정치군사적 위협이지만 최근 전개되고 있는 북미간의 첨예한 대결양상은 사태를 정면으로 돌파하고자하는 북한의 준비된 역공이다.

이북은 핵과 미사일을 매개로 하여 2003년 미국과의 일대 회전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미 준비되고 있었던 정치 공세를 미국이 이라크 침공에 정신이 없는 시점을 골라 전격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초강경 정책이 이번 사태의 동력이다. 북은 2000년 북미공동코뮤니케로 외화된 북미타협이 부시정권의 출범으로 무력화되면서 새로운 차원에서 북미공방을 준비해 왔으며, 2003년 1월말 2월초로 예견되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시기에 맞추어 초강경 역공세로 나서고 있다. 11)

지난해 10월 초 제임스 켈리의 방북 이후 미국은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무기개발 의혹'이라는 새로운 핵카드를 꺼내들었으며, 중유제공 중단조치를 취함으로써 북미제네바협정을 사실상 파기하는 단계로 돌입하였다.

북미 제네바 합의는 형식적으로 중수로형 원자로 동결과 경수로 제공이지만 본질은 이북의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이 북에 대한 핵안전과 경제제재 해제 등 포괄적인 관계개선을 담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중유공급 중단조치는 '핵선제공격전략'에 의한 미국의 '북한붕괴시나리오' 12)의 본격적인 가동으로 받아들여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중유공급 중단 이후 감시카메라 작동중지, 핵연료봉 및 방사화학실험실 봉인 제거,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이어지는 북한의 일련의 '핵동결해제조치'는 부시정권의 '북 붕괴시나리오'에 맞선 체제수호전략이자, 불안정한 제네바협정을 넘어 북미불가침조약체결을 통해 새로운

11) 북한의 역공세는 첫째, 중국과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 등 주변열강과의 관계개선 둘째, 남북관계개선 셋째, 경제개선조치(7.1), 신의주특구설치 등 경제개혁조치 등 다방면에 걸쳐 준비되어 왔다.

12) 시사저널 645호(2002년 3월 7일자)에 의하면, 부시 행정부의 상층부에서 붕괴시나리오 기조가 굳어지게 된 것은 2001년 10~11월 시점이다. 놀랜드가 전하는 '북한붕괴시나리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 : 이북에 대해 수사적 차원의 공격을 시도한다.
2단계 : 2003년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북을 돕지 못하도록 유도하며 마지막으로 이북의 고립과 붕괴를 위한 공작을 시도한다.
3단계 : 마지막 단계에 동원될 수단은 먼저 대북지원을 중단하고 다음으로 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핵 사찰을 강요하고 북이 이것을 거부하게 될 경우 이것을 빌미로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며 마지막으로 부시 집권 1기 말이나 2기에 결정적인 붕괴시나리오를 가동한다.

평화보장들을 짜겠다는 공세적 조치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북미간 불가침 조약 체결은 북미 제네바 합의를 뛰어넘는 북미간 양자 협정이라는 점,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라는 점, 평화협정의 사전 단계라는 점에서 북의 공세적 대응의 핵심이다. 13)

이에 반하여 미국은 선 핵포기 후 대화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사실상 이북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의 역공세에 마땅하게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군사적 공격은 이라크공격이 임박해 있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협력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남한에서의 반미감정의 고조와 이에 힘입은 정부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어 당장에는 감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른바 '맞춤형 봉쇄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외교적 고사작전'을 검토하였으나 이 또한 중국과 러시아, 일본, 남한 등의 국제적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최근 미국이 '평화적 해결', '과감한 구상', '북한과 대화를 할 것' 등 연속적인 유화제스처를 쓰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북핵 문제의 유엔안보리 상정', '선핵포기 선언 없는 대화 불가' 등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2) 북미핵공방에 대한 러시아, 중국, 일본의 입장

러시아의 경우 철도, 도로 연결, 동북부 지역의 개발 등 첨예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따라서 북미 각축이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데 강력한 이해 관계가 걸려 있다. 한편 북미 각축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에 대한 발언권이 강해지는 데 따른 정치적 이익이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이북의 입장에 동조적이다.

중국의 경우 한반도의 정치적 안정을 선호한다. 따라서 중국은 남북의 평화로운 공존(분단 상태의 지속) 또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이 관철되지 않는 방식의 조용한 통일을 선호한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강경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지만 이북의 공세적인 대미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한편 중국은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 블록을 창출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는 북러가 추구하는 철도, 도로 연결 구상, 일본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경계 등을 깔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 국면에서 북미간 중간적 입장을 취할 것이다.

일본의 이해는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상반되어 있다. 첫째는 미국의 대북 포위망에 공동 보조를 취하려는 전통적이고 정치적인 입장과 북러간 철도, 도로 연결 구상 등 고조되는 동북아시아 또는 동아시아의 경제 블록 과정에 결합하여 경제적 위기의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 내적 요구 사이의 갈등이고 둘째는 정치가, 관료 등 현실주의적 입장과 납치시인으로 중

13) 평화협정은 주한미군의 지위에 대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불가침 조약은 남측에서 주한미군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채 불가침하자는 것이다. 이는 부시 행정부 이래의 '선제 핵공격 전략'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음으로 설득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미국의 국제전략(선제 핵 공격 전략)과 미국의 '불량국가' 통제 정책을 해체하는 의미가 있어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다.

폭된 일본의 강경한 반복 여론 사이의 갈등이다.

9.17 북일 정상회담은 파월-아미티지 라인의 묵인 아래 일본의 현실주의적인 정치가, 관료 집단이 동아시아 경제협력 구상, 동북아시아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신장(6자 회담 등)을 고려하여 취해진 조치이다. 현재는 이러한 조치가 일본 여론의 악화,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따라 주춤한 상태이다. 그러나 북미 공방이 첨예화되면 전자의 입장이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일본이 이전 시기와 같이 한미일 대북 포위망에 적극 결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3) 북의 경제개선조치,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체제

북은 사회주의체제를 지키면서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6.15공동선언 이후 경제관리개선조치, 신의주경제특구 설치, 개성공단개발, 남북철도연결 등 광범위한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은 중, 일, 러, 남측과의 대화협력관계를 강화하여 미국의 군사패권주의를 약화시키고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관철시키려는 정책을 구사했다. 이를 위해 시베리아의 횡단철도 청사진을 들고 러시아를 방문하여 북러경협을 강화하고,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남북 경제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북은 북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식민지배 사죄를 명시한 적대관계 청산을 이끌어냈으며, 나아가 일본인 납치사실 인정 등으로 일본자본을 끌어들이며 미일안보동맹에 파열구를 내는 적극적인 대외외교정책을 구사했다.

신의주 특구 등 이북의 경제관리 개선 조치의 특징은 첫째, 98,99년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끝마치고 북미, 남북관계 개선 등 정치적 조치가 선행된 기초, 금속, 농업, 철도, 운수 등 이른바 인민경제 선행부문의 기초, 과학기술의 강조 등을 기초로 하여 취해진 조치로 자본주의적 경제 개혁, 개방을 경제 발전의 기본 동력으로 삼았던 중국 모델과는 구별된다. 둘째, 미국의 총체적인 적대정책, 경제봉쇄가 진행되는 조건에서는 성공하기 어렵다.¹⁴⁾

신의주 특구의 귀결은 이것이 성공하지 않더라도 이북이 붕괴할 가능성은 없다. 반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지속되면 성공할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신의주 특구는 북미 공방을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취해진 조치이고 부차적으로 북미공방을 우세한 조건에서 맞이하기 위한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취해진 조치이다.

이와 연관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문제는 동북아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각축이 진행되고 있다. 북러는 철도, 도로 연결, 에너지 협력, 동북 시베리아 개발 등에서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 이 기초에 대해 중국은 견제하고 있고 일본은 적극적이다. 한편 노무현 차기 정부의 동북아시아 물류 중심지 구상은 이와 연관이 있다. 남측내 제도권

14) 신의주 특구의 성공을 제약하는 미국의 대북봉쇄의 핵심은 법적 차원에서 본다면 국제구제금융(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 기구의 대북 차관 금지, 이북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고율 관세 등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북일 수교를 통한 일본 자금의 대북 유입 저지, 남북관계 봉쇄 등이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입장이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중국경제를 중심으로 아세안을 결합하는 체제구축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 북중 관계의 미묘한 대립은 이러한 사정의 반영이다. 미국은 동아시아와 동북아시아에 경제협력 구상이 창출되는 것 자체가 탈미적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으로 보면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구상은 점차 대체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미국의 입장이 약화되고 있다.

4) 북미핵공방과 남북관계

2002년 남북관계는 미국의 강압적인 대북 적대정책으로 우여곡절을 겪는 가운데서도 다방면적으로 발전해 왔다. 2003년은 남북관계는 북미대결이 본격화되는 정세와 맞물려 복잡성과 역동성이 맞물려 있는 정세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정권의 출범은 남북관계가 최소한 대결과 긴장국면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북미핵공방의 본격화로 미국의 남북관계통제가 본격화됨으로써 민족공조나 한미공조나를 놓고 첨예한 줄다리가 예상된다.

부시정권의 중유제공중단조치와 '맞춤형 봉쇄전략' 등 초강경정책은 이남정권의 '햇볕정책'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어서 일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여기에 '촛불시위'를 통해 확산된 반미감정과 반미투쟁은 남한정권의 대미입지를 상대적으로 강화해 주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대북 전쟁정책 반대를 내세운 노무현정권 출범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제약하는 요소로 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정권의 '햇볕정책'을 승계하는 한편, 대북정책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입장에만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노무현당선자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반대하는 입장과 한국정부와 협의 없는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최근 '한미관계의 재정립'을 요구하는 남한내부의 강력한 여론과 맞물려 있어 한미사이의 대북정책 조율과정에서 과거처럼 미국이 일방적으로 강압하는 것을 일정 정도 제약할 것이다. 최근 남측이 북의 선택포기선언, 문서를 통한 핵안전 보장을 내용으로 한 북미핵공방에 대한 중재안을 내놓은 것도 남측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은 여전히 '한미공조'를 기본으로 대북정책을 펼 것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의 정책에 긴박 되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정권이 김대중정권의 '햇볕정책'을 승계함으로써 미국의 극단적인 대북강경정책을 제어하는 역할을 일정하게 할 것이지만 미국의 남한 정부에 대한 통제정책도 강화되고 있어 노무현정권이 과연 김대중정부와 다른 대북정책을 보여 줄 수 있을 지는 회의적이다.¹⁵⁾

15) 김대중정권의 '햇볕정책'은 기본적으로 미국 클린턴 행정부 말기의 '대북포용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어서 "통일정책"이라기 보다는 "평화공존정책"에 가까웠다. 김대중정부는 대북화해노선을 견

특히 최근 미국은 치밀한 계획 아래 한국군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지스함, 에이태컴스 미사일 등 한국을 미국주도의 MD체제로 편입하기 위한 조치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으며, 대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의 강화와 함께 남북간의 군비통제와 재래식무기 감축 협상까지도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표명하였다. 더 나아가 미국은 정전협정체제를 무기로 하여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과 육로개설 등 남북사이 교류협력에 대한 제동을 본격적으로 걸고 있다.

또한 주목할 것은 남측내에서의 촛불시위를 통한 반미감정의 확산에 대하여 미국의 강경파들은 '주한미군철수'와 독자적인 대북 군사공격 시사 발언 등으로 남측 내부의 친미수구세력을 '협박', '선동'하고 있고 여기에 조감제를 비롯한 극우세력 들은 '쿠데타에 의한 노무현 정권타도론'을 공공연하게 주창함으로써 노무현정권을 통제하기 위한 총체적인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노무현 당선자가 한편으로는 미국의 강경정책에 제동을 걸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촛불시위자제요청' 등 미국눈치보기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에 긴박당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남측에서의 자주 평화역량이다. 높아지고 있는 대중들의 반미 의식과 반전 평화에 대한 지향이 어떻게 상승 발전하는가에 따라 2003년 남북관계의 향방이 가름될 것이라는 점에서 남측 내 반전반미 평화역량의 주체적 대응이 절실하다.

5) 북미핵공방의 전망

현 북미 갈등의 특징은 첫째, 전쟁이나 정치적 대타협이나를 가름하는 양단의 선택이 있을 뿐 어중간한 중간적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점 둘째, 이라크 전쟁 이전 시점에 중대한 전기기가 마련된다는 점 셋째, 이 공방의 결과에 따라 향후 한반도 정세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현재의 대결국면이 어느 만큼 심각하게 전개될 것인가, 과연 군사적 충돌로까지 비약할 것인가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열강의 견제, 남측내부의 반전 반미여론과 남측정부의 전쟁 비협조, 만만치 않는 북의 군사적 대응능력 등 미국이 전쟁을 감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반면에 미국의 입장에서 북과의 타협은 전세계적 범위에서 강행되고 있는 패권적 군사주의 정책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이라는 점에서 극단적인 군사적 모험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한반도 주변에 배치된 미국의 군사력이 94년 핵위기 때와는 다르다는 점, 걸프전에서의 불안전한 승리로 재선에 실패한 아버지 부시의 교훈도 부시정권의 모험적 도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격화를 방지하는 데 일조 하였으나 미국 부시정권의 등장 이후 강화된 대북 강경 봉쇄정책 국면에서 6.15공동선언 이후 가져왔던 상대적 주도성을 거의 상실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에 긴박당하여 왔다.

전쟁이 아닌 다른 길은 북미사이의 정치적 대타협인데 북의 입장에서나 미국의 입장에서나 한치의 양보 없는 대결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 정점에서 정치적 대타협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북미핵공방의 최종 귀결이 전쟁이나 정치적 대타협이나를 명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군사적 충돌까지도 예견되는 현재의 상황전개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사활을 건 과제라 할 수 있다.

5. 북미핵공방의 해법과 한국 사회운동진영의 대응

1) 북미핵공방의 해법

현 북미 각축을 해결하는 원칙은 당면한 전쟁위기를 해소하는 것과 함께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보장하고 향후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시아에 호혜평등한 안보대화, 경제협력 구상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위의 관점에서 한반도 전쟁 위기의 해법은 생각보다 간명하다. 문제 해결의 상수는 첫째는 국제원자력 기구나 핵확산금지조약이라는 국제 규범의 틀이 아니라 북미간 양자 협상을 중심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점, 둘째는 이북의 최소치 요구인 불가침과 경제제재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치적 대타협이 이루어진다는 점 셋째는 양자가 동시행동의 원칙에서 합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세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실현되지 않으면 정치적 대타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북미의 역관계에 따라 변화가 예상되는 지점은 첫째, 불가침 합의를 문서 보장, 공동성명, 조약 등 어떤 방식으로 채택할 것인가이다. 이북이 요구하는 조약의 문제는 미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반면 이북은 법적 담보가 없는 서면 합의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이북의 핵, 미사일 등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북의 경우 최소한의 카드를 남겨두고자 할 것이고 미국은 이번 기회에 이북의 대량살상무기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할 것이다. 셋째 주변 열강의 개입 정도이다. 중러일본유럽연합 등이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것인가의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2) 한국사회운동진영이 취해야 할 방향

현 북미 대결을 보면서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는 이러저러한 희망에 기초하여 문제를 바라보아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현 사태의 본

질은 이라크 침공 이전에 미국의 핵 위협을 제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기를 마련하며 이것이 6.15 선언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겠다는 이북의 초강경 정치 공세이다. 이 점이 이번 사태의 常數이다. 따라서 가령 선 핵포기-경제지원 따위의 중재안은 비현실적인 희망 사항이다. 비현실적인 중재안을 내놓고 시간을 끄는 것은 이라크 침공 이후로 상황을 연기시키고 모호한 해결책으로 상황을 호도하고자 하는 미국의 입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불가침조약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를 미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왕성한 자주 평화운동으로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

둘째는 전쟁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에 빠져 어떻게든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명제이다. 그러나 소극적인 자세는 전쟁을 막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향후 두고 두고 후환을 남길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공정함과 합리성을 갖춘 나라가 아니라 철저히 힘에 기반하여 행동하는 난폭한 폭군이다. 합리적인 설득에 의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없다. 굳이 이라크를 침공해야겠다는 합리적인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당당하고 강인한 입장을 가지고 미국의 전쟁 도발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데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따라서 북미 핵공방과 이에 따른 한반도 위기 해결을 위한 한국사회운동진영의 대응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향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북한의 핵동력과 북미불가침조약체결이라는 일괄타결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항구적인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북미핵공방의 본질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이에 따른 '북한붕괴시나리오'이다. 까닭에 '평화적인 해결'원칙만을 강조하거나 '전쟁반대'라는 소극적 태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평화적인 해결'에만 머무는 소극적 자세가 애매한 양비론을 낳고 있다. 국민 여론을 의식한 전술적 고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초점을 명확히 하지 않은 양비론은 여론을 호도하는 데 이용당할 수 있다.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평화는 '도덕적 가치'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저항과 투쟁에 의해서만 쟁취되는 것이다. 미국이 우리에게 보여 준 수많은 전쟁의 경험은 저항할 수단과 능력이 없는 나라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자비한 전쟁의 포화를 들이대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공세적 조치가 없다면 미국은 일방적으로 북한을 밀어 부칠 것이며, 그 끝은 전쟁이다.

둘째, 북미당자자 해결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은 북미핵공방을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 미국은 이를 이용하여 북미직접대화를 거부하고 문제를 유엔안보리 등 국제적인 틀로 끌고 가려고 한다. 이라크의 경험에서 보듯이 강대국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현상은 늘 전쟁의 억지 수단이 되기보다는 부도덕한 전쟁을 합법화시켜주는 데 일조할 뿐이다. 나아가 한반도를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만들어 민족의 이익을 심각히 훼손할 수 있다. 동북의 다자간안보체제는 북미대화를 통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폐지된 연후에 비로소 실효성이 있다.

셋째, 통일운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의 위험한 군사주의 정책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는 가장 근원적 방법은 두 말할 것없이 우리 민족 내부의 화해와 단합, 평화, 통일의 기운을 높이는 것이다.

3) (가칭) '자주·평화 범국민연대'를 구성하여 주체적으로 대응하자.

(1)필요성

북미핵공방의 해결은 전쟁을 막는 데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근원적으로 없애고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여 지금의 위기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민족이 반세기가 넘는 지긋지긋한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항구적인 평화를 누리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며, 평화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 과정은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끊임없는 긴장과 대화를 반복하면서 전진하는 지난한 과정이다. 따라서 북미 핵공방이 고조되면 놀라서 대응하다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한국사회운동진영의 대응태세를 심각히 반성해야 한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한국사회운동진영은 북미핵공방과 이에 따른 위기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살과 무죄평결에 분노하여 터져 나온 미국의 지배정책과 대북적대정책을 강력히 제어하며, 자주와 평화를 밀고 나가는 거대한 동력을 형성하고 있다. 민족자주의식의 발전은 반공의식의 약화를 촉진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북미핵공방에 대해 70% 이상이 미국책임이라고 응답한 것에서 나타나 듯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제어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운동진영은 미군문제, 평화문제 등 다양한 대응을 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안별 대책기구를 구성해 왔다. 이러한 사안별 대책위 활동은 그 때 그 때 사안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기여하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혔다. 우선 수많은 사안별 대책기구 구성으로 각 단체마다 부담이 너무 많다, 연대운동의 경험과 성과도 축적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높아지는 정세발전예 대응할 능력을 차츰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여중생 투쟁만해도 소파개정의 절대적 당위성과 방향을 제때에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 문제 등을 이슈화시키지 못했다. 그러므로써 "주한미군철수 주장은 안된다" "순수성을 벗어나 주한미군철수 등 반미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이데올로기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최근 미국내 강경파들은 "한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다"는 식의 '협박'과 선동으로 '전통적인 한미관계'의 훼손에 따른 국가적 손실에 대한 우려, 안보불안심리 조장 등 새로운 방식의 이념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연동하여 수구세력들은 '주한미군철

수반대집회'를 개최한 등 조직적인 반격을 피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그대로 두고서는 민주주의의 진전도, 사회적 개혁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그동안 충분히 경험했다. 바야흐로 미국과 주한미군의 해악을 놓고 다투는 차원을 뛰어 넘어 한미관계의 근본문제와 그 결정체인 주한미군의 존재에 관한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분산적이고 아마추어적인 대응태세는 새로운 높이의 대응을 전개할 수 없다. 소파, 한미상호방위조약, 북미불가침조약 등의 문제는 전문적 능력과 집중적인 실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응태세 없이는 대중적 파급력을 갖기 어렵다.

(2) 성격과 과제

이 기구는 자주와 평화를 지향으로 하여 소파개정, 작전지휘권반환, 전쟁반대, 북미불가침조약체결을 공동과제로 하는 '준상설적인 연대기구'이다. 물론 이 과제에 동의하는 단체나 인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준상설기구'라 함은 '상설적인 연대조직'은 아니되 '한시적이고 하나의 사안에 국한한 연대기구'도 아니라는 뜻이다. 굳이 말한다면 올해 정세가 요구하는 공동의 의제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상설조직으로의 발전가능성을 열어 가는 연대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파개정'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상하고 주권을 되찾고자 하는 국민적 지향이 모아진 구호이다. 소파문제는 그 모범인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그 약한 고리인 '전시작전지휘권환수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전시작전지휘권환수운동'은 반전평화운동과 결합하는 매개고리이다. 현재 우리 나라 법과 제도로서는 북미간 전쟁이 발발하면 자동적으로 미군의 지휘아래 전쟁에 가담할 수밖에 없다.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상징이며, 한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로 국민적 공감도 매우 높다. 현대 대다수의 국민들은 전시작전지휘권환수에 찬성하고 있다.(최근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 전시작전지휘권환수를 요구하는 여론이 85%이상/ 이중 즉시환수가 39% 능력 키운 후 환수가 49%였다) 따라서 반전평화운동은 작전지휘권 환수운동과 결합할 때 효과적이다. 여기에 전쟁반대의 수준을 넘어 북미불가침조약 체결을 들고 나가야 한다.

물론 이 사안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 때나 다 묶어서 들고 나갈 수 없다. 각각의 운동이 갖는 상대적 독자성을 살려 나가면서도 "소파개정! 전시작전 지휘권 환수! 전쟁반대! 북-미불가침조약체결"을 자주 평화라는 지향으로 묶어서 대응해 나간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3) 구성방식과 경로>

- <여중생 범대위>의 성과를 계승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당면한 반전평화운동은 여중생 투쟁으로 모아진 국민적 힘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되고 역으로 여중생 투쟁도 당면한 정세에 대한 대응력(반전평화)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현재 여중생 범대위는 그 형식상 한

반도 위기 문제 등 평화운동을 적극 벌이기에는 제약이 있다.

- 따라서 여중생 범대위의 성과를 계승하여 자주 평화문제를 다루어 나갈 수 있는 범국민운동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경우 여중생범대위는 발전적으로 해소하는 것이지만 대중적으로는 전환하는 것이다. 여중생 범대위를 해소하면 여중생 투쟁의 기세가 꺾이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촛불시위 등 대중운동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계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조직적 측면에서 보자면 (가칭) '자주·평화 범국민연대'안에 '여중생위원회'를 두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 여중생대책위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여러 단체들의 주인다운 참여와 민주적인 운영을 보장하도록 조직은 새로이 짜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가칭) '자주·평화 범국민연대'가 만들어진다면 이와 관련된 연대기구들도 이 기구 안의 위원회 형식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물론 이는 해당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다.)

부문토론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한반도 위기 해법

북핵문제로 본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우리의 실천과제

유영재 자통협 사무처장

1.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은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에서 미국의 세계 유일 패권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수립되고 집행되고 있음

- 남은 동북아 패권 유지·강화의 전초기지(MD체제편입, 용산기지에 동북아지역 시물레이션 센터 설치 등)

- 북은 세계패권추구의 걸림돌로서 제거해야할 대상, 전한반도에 대한 지배권 행사의 장애물, 군산복합체 이익 실현과 세계 패권 추구의 도구(악의 축 발언, 핵 선제공격 계획, 부시의 김정일 정권 전복 발언)

□ 미국의 주요 대북정책 변화

'74년 - 전진방어전략 : 인민군의 서울 남진 저지, 개성 장악

'92년 - 작전계획5027 : 원산 상륙 후 평양장악

'02년 - 국가안보전략보고서 : 핵 선제공격 공식화

2. '북핵'문제 본질

□ 북의 주동적 조치에 의하여 자체의 경제관리 개선조치, 동북아 화해협력과 평화의 중대한 진전을 가져올 남북, 북일관계의 획기적 개선 움직임이 나타남

□ 이에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자국의 패권 훼손 또는 상실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남북, 북일관계의 진전을 가로막기 위하여 '북핵'문제를 끄집어 냄.

□ 50여 년 간의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최근 부시정권의 핵선제공격계획 등으로 체제안보와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느껴온 북은 미국의 남북, 북일관계 개선 방해책동과 중유공급

중단, 서산호 나포 등을 보면서 미국의 대북고립압살책동을 바꿔내지 않고서는 체제와 생존이 보장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정치적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핵문제를 카드로 삼음.

□ 이것이 미국이 '북핵'의혹을 제기하고 북이 '방어적 핵무기 개발 권리 선언'으로 맞서 문제가 본격화된 이른바 '북핵'문제의 본질임.

3. '북핵'문제를 바라보는데서 나타나는 몇가지 편향

1) 양비론

사안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현상적 사태 접근, 실천적으로는 근본적 책임이 있는 미국을 편드는 결과를 초래함 - 미국에 대해서는 비판과 압박의 태도를, 북한에 대해서는 공조와 설득의 태도를 취해야 함

2) 북정권과 인민을 분리하는 사고

□ 북이 요구하는 체제안보를 정권안보와 동치시키면서 북정권과 인민의 이해가 서로 다르다고 보는 입장.

- 이는 부시가 김정일체제의 '전복'을 공언하는 마당에서 부시정권의 대북고립압살책동을 정당화하여 미국의 침략전쟁에 길을 터주는 매우 위험천만한 사고. 설사 북정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미국의 논리에 악용될 것이므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전쟁가능성에 대한 일면적 인식

□ 전쟁 필연론 : 미국의 극단적인 패권성과 가공할 군사력을 절대화하여 북이 양보하지 않으면 전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는 입장.

- 이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북의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실천적 태도로 귀결됨.

□ 전쟁 불가론 : 북의 단호하고 주도면밀한 대응, 전쟁시 미증유의 피해, 미국의 경제 위기 등을 들어 전쟁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입장.

- 비주체적이고 안이한 대응 가능성

4. 전망 - 전쟁이나, 평화나'94년 위기와 비교하여)

1)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 부시정권의 극단적 패권성과 반확산전략
- 북을 겨냥한 고성능 무기의 개발과 배치
- 북정권의 이른바 '호전성', '벼랑끝 전술'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시각
- 부시정권이 이라크 전쟁에서 목표를 달성할 경우

2) 전쟁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

- 이남정권의 반전 입장
- 남북당국간 관계의 개선
- 남의 반미반전운동의 활성화
- 미국 등 국제반전평화운동의 활성화
- 조러관계의 개선
- 전쟁 참여에 대한 일본의 소극성
- 부시정권의 극단적 패권성에 대한 다른 나라 정부의 부정적 인식
- 부시정권이 이라크 전쟁에 실패할 경우(전쟁 불가 또는 전쟁장기화 등)

5. 한국사회운동의 과제

- 북핵문제의 원인과 본질, 해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대중적 교양 필요
- 반미자주, 반전평화운동의 통일적인 조직적 주체 마련
- 미국의 대북압살책동 규탄투쟁과 반전평화운동의 대대적 전개 - 이 양자는 상호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 국내외에 걸친 광범위한 반미반전 여론 조성을 통하여 부시정권이 한국시민사회의 요구와 운동을 주요 변수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부문토론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한반도 위기 해법

한반도 위기 해법과 북한 에너지문제

석광훈 녹색연합 정책위원

I. 흑연감속로개발을 둘러싼 북미간 공방의 기만성과 문제

1. 북·미 양국 강경파들의 볼모가 된 북한의 에너지난

북한 군부 강경파의 선동이 아니더라도 북한 민중들의 에너지난은 매우 다급한 문제이다. 대부분의 전력인프라가 일제시대에 건설되어 제대로 가동이 안될 뿐더러 지난 1990년대 두 차례의 대홍수는 대도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방의 송전망을 파괴시켰다.

이로 인해 산업동력용 전력은 물론 의료시설, 공공시설 등 필수적인 부문에도 전력공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지난 1990년대 초반이후 정치군사적 긴장의 쟁점이 되어온 북미간의 흑연감속로와 핵무기개발 공방은 이러한 북한의 에너지난에 아무런 대안이 되어오지 못해왔다. 또한 1994년 임박한 전쟁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체결한 북미간의 제네바합의와 경수로 프로젝트 역시 북한의 에너지난을 해결해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에너지난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술적으로 2010년 이후에나 완공이 가능한 경수로의 건설기간은 제네바합의와 연동되어 있는 북한의 흑연 원자로 해체도 그만큼 연기될 것이고, 이의 감시를 둘러싸고 북한의 강경파와 미국의 강경파들에게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시키고 한반도는 반영구적으로 전쟁위험에 시달려야 할 것이다.

2. 경수로사업은 한반도의 긴장을 장기화시킨다

1)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도 IAEA의 핵사찰로 인한 군사적 긴장을 일으킬 수 있다

경수로는 흑연 중수로에 비해서 플루토늄 배출비율이 낮은 편이지만,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경수로는 큰 용량으로 인해 북한이 자체 건설한 흑연 중수로보다 오히려 더많은 플루토늄을 배출하게 된다. 바로 이 플루토늄 때문에 경수로 지원 그 자체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남·북간, 북·미간 정치적 공방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미 지난해 UNDP도 핵발전소는 100만KW급 1기당 연평균 200kg 정도의 플루토늄을 배출하게 되며, 핵무기 개발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람직한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플루토늄이 함유된 경수로의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로 IAEA의 감시는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며 핵사찰의 수용 여부는 북한의 정치적 여건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마찰과 군사적 긴장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 최근 이와 유사하게 UN 무기사찰단의 이라크 화학·핵무기사찰문제로 인해 전쟁 체제로까지 가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 또한 지난 92, 93년 북한의 IAEA 핵사찰 거부와 핵확산금지협약(NPT) 탈퇴 선언으로 인해 엄청난 전쟁 위협에 시달린 경험이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2) 북한의 경수로 가동은 동북아지역의 긴장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북한에 경수로가 제공되어서는 안될 또 하나의 이유는 일본의 핵무기 개발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플루토늄을 연료로 사용하는)고속증식로 계획의 실질적인 포기로 인해 5.4톤(t)이나 되는 순도 높은 고농축 플루토늄의 상업적인 존재이유가 없어져 버렸다. 이처럼 방치된 고농축 플루토늄의 존재 자체로 인해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더구나 몇 해전에 일본은 대륙간 미사일을 추진할 수 있는 장거리 로켓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데에 성공했다.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일본은 그야말로 마음만 먹으면 수주일 내에 핵미사일을 제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북한이 경수로를 가동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배출된 사용후핵연료를 둘러싸고 핵무기 개발 의혹은 언제든 제기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의혹과 군사적 긴장이 계속 반복된다면 일본의 우익 강경파와 자위대는 북한 핵개발의혹을 빌미삼아 일본의 핵무장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한국형 경수로"의 대미 의존성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는 순수하게 우리 기술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에 제공될 "한국형 경수로"는 [제어계측]분야를 포함한 핵심 시설과 기술의 70%는 컴버스천 엔지니어링(CE)사를 포함한 미국 핵산업계에게 의존해야 한다. 실제로 북한이 1994년 제네바합의 당시 "한국형 경수로"를 받아들인 이유도, 그 꺾데기가 어느 나라 제품이건 핵심기술과 부품은 미국 CE사의 것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에 "한국형 경수로"를 지원한다고 해도 건설비의 상당 액수를 미국 기업에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국 행정부와 의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수소가 지금부터 기술적으로 순탄하게 건설된다 하더라도 완공 시점인 2008~2010년에 가더라도 핵심설비인 원자로

와 그 주변시설이 북한에 인도되기까지는 얼마든지 미국의 매과정치세력에 의해 거부되거나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경수로의 화력발전소로의 대체안은 에너지난을 불모로 한 북미 강경파들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신속하게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검토될 수 있다.

4. 경수로는 북한의 에너지 실정에 맞지 않는다

1) 건설工期가 긴 경수로는 시급한 북한 전력난해소에 도움이 될 수 없다

북한의 에너지난은 매우 다급한 것에 반해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에 의거해 2003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경수로는 그 동안 부지기만 공사정도만 진행되었을 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당장부터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2010년 이후에나 전력공급이 가능한 경수로프로젝트는 최근 심각한 전력난으로 당장 전력공급이 필요한 북한에게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LNG복합발전소나 다른 화력발전소의 경우 건설공기가 핵발전소의 절반이하인 3년내에 완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의 위급한 전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2) 대형 핵발전소는 북한의 전력 수요 지형에 전혀 맞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한과 달리 거주체계가 분산되어 있고, 통일후에도 도시의 광역화가 어렵기 때문에 수요지(需要地) 밀착형 전원개발이 적합함을 지적한다. 즉 한국처럼 대용량의 발전소를 장거리 송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용량 발전소들의 지역 분산형 배치가 더 적합하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북한 송·배전망의 전력손실율은 30%~50%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200만KW급이나 되는 대용량의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해도 엄청난 전력낭비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농업과 공업에 필요한 동력(動力)에너지뿐만 아니라 겨울철 난방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전력만 생산하는 경수로는 난방 에너지를 대체할 수는 없다. 전력 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는 에너지 손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융통성이 없는 경수로보다는 열병합발전소처럼 발전(發電)과 난방을 동시에 수행하는 발전 형태가 적합하다.

II. 대북한 비핵발전소지원 5대 정책대안

1. 북한의 전력수요조사와 낙후한 송·배전망 보수가 우선되어야 한다

에너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 송·배전망의 전력손실율은 30%~50%에 이를 정도로 낙후해 있으며 최종소비현장에서의 이용효율도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200만KW급이나 되는 대용량의 발전소를 건설하기보다는, 낙후한 송·배전망에 대한 보수작업과 전력소비현장에서의 손실을 극소화하도록 기술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전력수요의 예측과 그에 맞는 발전용량의 하향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이러한 작업이 진행된다면 실제로 공급할 발전소의 용량과 건설비용은 애초 계획보다 상당 정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2. 비정치적인 LNG복합발전소를 공개입찰을 통해 도입해야 한다

우리정부는 지금이라도 북한에 제공할 발전소를, 핵발전소보다 훨씬 저렴하고 고효율의, 그리고 빨리 건설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발전소로 전환해야 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가스전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LNG의 복합발전이 그 대안으로 상정될 수 있다. 기존의 핵발전소나 화력발전소의 열효율이 30%~35%정도인데 비해, LNG복합발전의 경우 60% 정도이며 여기에 열병합발전을 적용하면 75%~85%까지 높아진다. 경제성의 측면에서도 국제에너지기구(IEA) '95년 보고서에 따르면, 1KWh당 원가별로 비교할 때 LNG복합발전이 6.3센트, 핵발전이 9.1센트, 석탄발전이 9.7센트로 LNG발전가격이 경수로가격에 비해 월등하게 저렴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 난방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에게는 LNG를 통한 열병합발전소를 분산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우리정부는 이러한 진보된 발전소들의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국제공개입찰을 벌여야 할 것이다.

3. 남·북한 전력계통연계사업을 앞당겨 추진해야 한다

현재 우리는 기저부하용 발전소인 핵발전소와 유연탄발전소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고, 북한측 역시 수력발전소 위주의 기저부하용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시행하기로 밝힌 남·북한간 전력계통연계사업은 겨울철 남아도는 전력을 북한에 공급하고, 냉방전력수요로 인해 부족한 전력을 북한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인 남북한 에너지협력사업이 될 것이다. 우리측이 이 사업을 보다 빨리 진척시킨다면 북한 신포 등지에 건설할 발전설비의 규모와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는 우리측의 여름철 거품수요로 인해 과도하게 건설된 발전설비의 설비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므로 경수로 건설보다 부수적인 효과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4. 북한에 지역자립형 전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자립형 소규모 발전설비를 독려하고 있는 북한의 전력정책방향에 맞게 소수력,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개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만약 북한측과 신재생에너지 개발협력이 성사된다면,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이 비핵 화력발전소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는 국제 금융기구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북한은 지난해 12월 미국의 민간 에너지연구소 초청으로 미국 에너지성(DOE)과 세계은행(World Bank) 등을 방문해 풍력발전으로 전력공급되는 시범용 촌락조성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00년대 초반이면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방출규제가 시행될 것이며 우리도 곧 규제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부속서 I (Annex I) 국가군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기후변화협약이 허용하고 있는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의 일환으로 북한지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개발협력사업은 우리에게 유리한 입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통일을 대비하여서도 북한지역의 신재생에너지를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기술도 적극 육성해야 할 것이다.

5. 우리정부는 북한에게 보다 확고한 핵무기개발 포기자세로서 비핵발전소 건설을 촉구해야 한다

북한 경수로지원안은 핵무기개발의혹과 군사적 긴장감을 전혀 해소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의 효율적인 에너지계획을 방해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 핵개발의혹 제거문제는 에너지개발문제와 분리시켜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의혹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핵발전소도 건설하게 해서는 안된다. 일각에서는 구공산주의권의 원자력에 비해 서구의 원자로는 플루토늄 추출이 더 어렵다고 하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는 서구에서 제공한 원자력으로 핵무기 개발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정부가 경수로를 이용하여 핵폭탄에 필요한 원료인 삼중수소(tritium)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북한의 에너지개발을 지원할 것이라면, 대규모핵발전소를 지어놓고 보자는 식의 어설픈 접근이 아니라 정확한 북한의 에너지상황 점검과 전문적인 에너지정책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보다 분명한 핵무기개발 포기자세로서 경수로건설계획을 비핵발전소로 전환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그동안 5MW짜리 흑연감속로의 사용후연료에 대해서 군사적 긴장을 일으켜온 미국과 IAEA가 그 40배 규모인 경수로를 건설한 뒤에는 여기서 발생할 사용후핵연료를 둘러싸고 암전히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이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정치적 마찰과 군사적 대립은 북미 양국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우리측에서는 그만큼 군비를 확대시켜야 하므로 통일전망은 그만큼 악화될 것이다. 북한 역시 만약 핵무기 개발욕심이 없다면 전력공급용으로 굳이 비싼 핵발전소를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보다 저렴하고 사용후핵연료의 부담이 없는 다른 발전소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부문토론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한반도 위기 해법

2003년 북미관계의 전망과 한반도
평화보장체제

김이경 통일연대 사무처장

1. 2003년 북미관계의 전망

2003년 북-미관계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즉 북-미관계는 어중간 타협으로 절충될 가능성은 전무하며 ① 북미관계의 정상화의 방향을 분명히 한 핵 포기 - 대북안 전보장 일괄타결인가 아니면 ② 미국에 의한 대북 전면전을 불사한 팽팽한 긴장과 대립의 연장인가 하는 기본 대립이 북-미 관계, 남-북 관계, 동북아 각 국의 이해관계등 각 세력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북미관계 각축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북은 지금의 핵공방으로 불어진 북미공방을 단지 핵과 에너지문제로 보고 있지 않다. 즉 미국의 대북고립압살책동을 분쇄하고 북의 생존을 사수할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민족의 자주권과 통일을 실현해나가는 대단히 결정적인 국면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선군정치를 제일 앞자리에 세우며 미국의 패권적 공격정책에는 자주적 국방력으로 맞선다는 기본 방향을 주선으로 하면서 미국을 실질적인 북미정치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한 다방면적인 전술을 병용하여 구사하고 있다. 미국은 대단히 공세적인 듯이 보이지만 사실 대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 기초조차 정리하지 못한채 갈팡질팡의 연속적인 혼란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시간끌기로 요약되는 미국의 대북정책의 속셈은 대북고립정책 - 한반도에서의 냉전과 분단을 고착화한 과거로의 회귀 - 나아가 대북전면전을 불사한 한반도의 완전한 군사기지화로 압축되는바, 북의 NPT탈퇴로 상징되는 미국의 핵 패권주의 무력화 공세에 대하여 뚜렷한 대응방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대북화해정책을 내건 노무현의 당선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을 파탄내고 대북고립을 전면화하려는 미국의 정책은 더욱 심각한 장애에 직면하고 있으나 노무현 정권 역시 미국에 의해 군사적, 경제적으로 예측되어 있는 정권의 한계로 인하여 미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민족공조의 기치 속에서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를 실현하는데 많은

질곡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북-미관계는 북의 선군정치를 기본으로 한 전방위적인 대화와 평화전략, 이남의 자주애국세력의 투쟁이 전체 정세를 어떻게 주도하여 가는가 하는 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라크전문제, 중국과 러시아 일본등의 입장정리 등을 기본으로 하여 기본 가닥을 정리해나갈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한반도 평화보장체제에 대하여

북미관계가 어중간한 타협으로 정리될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분명하듯이 이에 대하여 북과 미국을 중재하려는 그 어떤 평화보장체제도 그 현실성이 없다. 최근 북은 북미불가침 조약체결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접점을 애매하게 한 채 북-미 관계에 간섭하려는 주변국들에게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으며 미국으로서도 북의 핵포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그 어떤 대화도 응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 일부에서 미국이 불가침 조약까지는 않더라도 미국이 대북안전보장을 문서로 합의하며 이를 동북아 평화보장체제를 만들어 담보하자는 의견이 제출되고 있으나 이는 94년 북-미 제네바협정까지 무효화한 미국의 그간의 행적으로 볼 때 결코 북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 물론 동북아 주변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대북 고립 압살 정책을 포기한다는 책임있는 조약을 체결한 기초 위에서 제출될 수 있는 문제이며 지금은 핵 공방을 비롯한 한반도에서 무력도발을 감행하려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근본적으로 포기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주변국들의 활동방향일 것이다.

3. 한반도 평화보장을 위한 근본방도는 무엇인가

-민족공조로 자주와 평화를 실현하는 것만이 그 기본방도이다.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이 자신의 패권적 세계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그 무슨 타협인들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전쟁을 막기 위한 근본방도는 전쟁구실을 안 주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 데에 있다는 이 명백한 진리이다. 즉 이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사이의 대립과 투쟁에서 우리가 가져야할 근본 입장은 민족전체의 자주권을 수호하는 단합된 힘을 어떻게 실현하여 가는가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만 평화마저도 지켜질 수 있다는 기본관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바야흐로 민족 자주통일세력과 내외 반통일세력간의 한판 전면대결이 불가피하다. 이 대결에서 승리한다면 2003년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안정적인 국면으로 들어가는 반면 패배한다면 민족공멸의 전쟁이다.

지금 반전평화운동은 전 국민적인 지지와 동의를 받고는 있으나 아직 선진대오에서부터 아직그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한계로 되고 있다. 지금 한반도의 위기는 막연

부문토론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한반도 위기 해법

2003년 여중생 투쟁의 전망과 과제

김종일 여중생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하게 평화를 외친다고 해결되는 상황이 아닌 미국의 세계 패권주의와 민족의 생존과 자주권을 확보하려는 양보할수 없는 대 점점 속에서 진행되는 엄혹한 사투임을 명백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이 명확하다면 담은 반전평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되 7천만 전 민족의 힘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려는 단합된 힘을 마련하는 것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북에서는 북미불가침 체결요구라는 방향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남에서는 반전평화운동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북미불가침 체결요구가 단지 북의 요구만이 아니라 그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전체 민족의 요구임을 드높게 들고 나가면서도 소파개정,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의 방향 속에서 제출되는 전시 작전 지휘권 환수 투쟁등을 전면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또한 이런 제반 자주화 투쟁뿐만 아니라 한미일 공조가 아닌 민족공조의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는 제반 활동과 함께 민족의 교류와 협력, 통일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최소한 한반도를 다시 냉전과 갈등으로 되돌림으로써 분단을 영속화하고 이남을 계속 미군의 전진기지로 확보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무력화시켜야 한다.

1. 그간 여중생 투쟁에 대한 평가

① 성과

- 숭미 사대주의가 만연해 있던 우리 사회에 민족자주의식을 광범위하게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여중생 범대위에 16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망라되고 지역별로 대책위가 꾸려짐으로써 여중생 투쟁을 일상적이고 전국적으로 퍼나갈 수 있는 조직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대규모 미대사관 앞 집회를 성사시킨 데 이어 수만의 시청 앞 집회, 미 대사관 인간띠잇기 대회, 성직자 릴레이 단식철야농성, 장기간의 촛불 시위, 방미투쟁 등 대규모 대중적 투쟁과 강고한 투쟁을 연이어 성사시켜냄으로써 민족자주투쟁의 역사적인 발전을 이뤄냈으며 국민들은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되었다.

② 한계와 문제점

- 비록 대중적인 구호로는 아니더라도 두 여중생 죽음의 근본 배경이자 여중생 투쟁과 민족자주투쟁의 발전 경로라고 할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연합군사지휘체계, 작전통제권 등의 문제점을 함께 알려 나가지 못했다.
- 투쟁방향과 계획이 정세에 맞게 제때 제시되지 못하여 주동성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고 기층대중조직에 대한 의식화, 조직화 사업이 충실히 이행되지 못했다.
- 집회 참가 대중들의 준비 정도에 맞게 그들의 의지를 모아내고 고양시켜 낼 수 있는 투쟁 현장에서의 비폭력 평화기조의 전술방침이 일관되게 견지되지 못함으로써 일부 시민들과 네티즌들의 분열을 초래하였다.

2. 여중생 투쟁을 둘러싼 최근 주객관 정세

① 미국 및 정권·친미수구세력의 공세

- 친미수구세력의 이념공세가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국내 친미수구세력들은 여중생 투쟁이 북을 이롭게 하는 친북 운동으로 몰아가고 있다.
- 한국 및 미국 정부가 나서서 한미SOFA 운영개선 합의나 한미SOFA 개정 불가(올 해 1월 12일 노 당선자와의 면담과정에서 켈리의 SOFA개정 불가 방침 천명)나 하며 한미SOFA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고 있다.
- 작년 12월 16일 뉴욕 타임즈의 미 국방부 군정보작전 영역의 확대 보도 등에서 보듯이 미국의 여론조작과 왜곡을 통해 여중생 투쟁을 잠재우려는 공세가 본격화하고 있다.
- 노무현 당선자의 '촛불 시위 자제' 발언과 양마와의 촛불 시위 논쟁, 수구언론들의 공세가 펼쳐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일정하게 대중들의 투쟁 참여가 위축되고 있다.

② 주체적 상황

- 4대 과제 가운데 어느 하나도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투쟁의 장기화, 노무현의 당선 등으로 투쟁이 일정하게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대중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해 왔던 기존의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업을 통해 대중 속에 깊이 뿌리내리며 투쟁의 장기성에 대비해 나갈 것을 요구받고 있다.
- 4대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투쟁고리를 찾아냄으로써 대중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승리의 전망을 열어가야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3. 향후 여중생 투쟁의 전망과 과제

① 전망

- 여중생 투쟁은 미국뿐 아니라 각 국의 반응에서 보듯이 향후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의 정립과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등을 새롭게 규정할 주요변수가 되고 있다.
- 2003년에도 여중생 투쟁은 미국에 의해서 조성되는 한반도 위기국면을 돌파해 나가는 데 중요한 투쟁고리가 될 것이다.
- 여중생 투쟁과제에 당면 정세에서 요구되는 반전평화의 내용을 잘 결합시키고 기계적으로 분리하거나 대립시키지 말고 상호 보완해나가려는 대중의 요구가 점차 커질 것이다.

② 과제

- 무죄판결 군사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내고 중대장 등 지휘자를 기소하며, CVC헬멧과 AVLМ제작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투쟁고리를 찾아내야 한다.
- 한미SOFA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범국민적 요구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 내부 정책 역량의 강화를 통해 여중생 범대위에 대한 미국 극우세력과 국내 친미수구세력의 반미·친북 공세를 돌파할 논리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대 언론 대책을 비롯한 대 국민 홍보사업의 획기적인 강화를 통해 이들의 참주선동을 제어하고 여중생 투쟁의 정당성을 대중 속에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한다.
-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연합군사지휘체계, 작전통제권 등에 관한 교양선전사업을 대중적으로 전개한다.
- 여중생 투쟁과제와 반전평화 내용과의 상호 연관성과 통일성을 정확하게 정립하고 선전해나감으로서 정세와 대중의 요구에 올바르게 부응해야 한다.
- 투쟁의 전국화를 이뤄내도록 지역조직과의 연계를 더욱 밀접히 가져가야 한다.
- 여중생 범대위의 사업 방식과 조직 체계 및 운영에서 최대한 유연성과 포용성을 발휘해야 한다.
- 비폭력 평화적 방식의 투쟁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도록 한다.
- 투쟁사안의 성격에 따라 대중의 준비정도에 맞게 대중이 폭넓게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사업방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쟁점토론

1 부

이천삼년 이월팔일 오전 아홉시부터 열한시까지

하나

정치개혁의 방향과 과제

주관단체	참여연대
사회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발제	김태일 영남대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성공회대
토론	김대영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조영숙 여연 박진섭 환경운동연합

둘

이주노동자운동과 한국사회의 과제

주관단체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사회	최의팔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
발제	석원정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
토론	이종구 성공회대 차미경 국제민주연대연대 박영삼 비정규노동센터 정진우 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 실장

셋

국가기간산업의 공공성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주관단체	국가기간산업사유화저지공투본
사회	박석운 민주연대집행위원장
발제	나상운 공공연맹 정책국장
토론	박홍수 철도노조 기획국장 이호동 발전산업노조 위원장 박순성 참여연대 서영원 환경운동연합

넷

사법제도 개혁과제 - 형사절차와 인권보장을 중심으로

주관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	김인희 민변 사무차장
발제	위대영 민변 변호사
토론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쟁점론 하나

정치개혁의 방향과 과제

바람직한 선거법제도 개정방향

손역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성공회대

1. 머리말

2003년의 우리 정치 화두는 정치개혁이다. 지난 16대 대선을 통해 국민들이 낡은 정치질서를 거부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열망하고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각 정당들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7년의 15대 대선에 이어 잇달아 16대 대선에서도 패배의 쓴잔을 마신 한나라당은 물론 선거에서 이긴 민주당과, 6.13 지방선거와 16대 대선을 통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한 민주노동당도 정치개혁을 소리 높여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 같이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정당마다 개혁의 우선과제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고 국민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 지도부의 교체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민주당인데 당의 발전적 해체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정치개혁의 구체적인 과제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사실 정치개혁의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2004년 4월 15일에는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다. 그런데 선거법 제24조는 선거가 치러지기 1년 전에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2003년 4월 15일 이전에 선거구획정이 완료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선거와 관련된 정치법과 제도의 개혁이 완료되어야 하는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불과 3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선거법의 개정은 물론이고 공천과 관련된 정당법, 선거자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까지 4월 15일 이전에 함께 고쳐야 한다.

2. 선거제도 개정방향

선거제도 개정의 기본 방향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정치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돈이나 지역감정 등이 민의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항 목	현 영	개정 방향
선거제	단순다수제/1인1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1인2표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4.9 : 1	1 : 1
국회의원 정수	273명 (지역구 227 전국구 46)	필요시 합리적으로 조정
선거구획정위원회		현직 정치인 배제 국회 추천 받은 전문가로 구성 선거구획정위 권한 강화
인구상하한선	9만~35만 (3.8:1)	2:1 넘지 않도록 조정
비례대표 배분	정당별 후보자 득표수 합쳐 그 득표 비율로 배분 지역구에서 5인 이상 당선되거나 유효득표율 5%이상인 정당	정당투표 득표비율로 배분 지역구 1인 이상 당선되거나 유효득표율 2%이상인 정당
비례대표명부작성		민주적 공천절차 구체적 규정
언론조사	선거운동기간 중 발표 금지	선거운동기간 중 발표 허용
출구조사	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언론사의 출구조사 허용	언론사 출구조사 투표구 50m 이에서 허용
정당활동에 대한 제한	선거일 30일 전부터 정당활동 제한	선거일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간주
시민단체 선거운동	정당 후보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외의 개선과 의사표시 허용 후보자 초청 토론 할 수 있는 단체는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 허용	선거법 87조 폐지
선거연령인하	20세	18세
사전선거운동		폐지 방법상의 제한규정만 존치
공직사퇴시한	국회의원 지자체장 선거입후보시 등 특 전까지 사퇴 지자체장 국회의원 입후보시 선거일 전 180일까지 사퇴 (타지 60일)	공직사퇴시한 통일
기탁금	국회의원은 2000만원	기탁금 100만원으로 조정
선거운동제외비용		제외 비용의 범위 축소
공소시효	6개월	공소시효 특례규정 폐지, 형사소송법에 준하여 적용 선거사범의 신속한 수사규정 도입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한 비례대표 선출방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전국구 선출방식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유권자들이 각 지역구의 후보들에게 던진 표를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로 간주해서 전국구 의석을 배분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전국구 자체를 없애고 모든 의석을 지역구선출로만 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 이미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의 비례대표에 대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실시한 바 있다. 따라서 정당투표제라고도 불리는 1인 2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은 확정적이다. 다만 지역구 선출 의석과 정당투표 선출 의석의 배분 비율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배분에 참여하는 기준-이른바 진입장벽-과, 정당명부 작성 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정치개혁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여부가 가려질 것이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의석 배분 비율을 1 대 1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이 경우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지역대표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의 의석 273석을 1 대 1로 나눌 경우 지역구 137석, 비례대표 136석이 될 것이다. 그 경우 지역구가 지금의 227석에서 90석이 줄어야 하는데 인구편차를 감안한다면 충북이나 강원 등 인구가 적은 지역은 의석수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도의 수가 늘어나야 한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안은 전체 의석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늘리는 것이다.

비례대표 명부 작성시 당의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지도부나 공천심사위원회가 비례대표 명부의 2-3배수로 후보를 선정하고, 이를 대의성 가진 기구의 투표를 통해 다득점순으로 순번을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또 비례대표 후보도 지역구 의원 후보와 마찬가지로 학력·경력·전과 등을 소상히 밝혀 국민의 정당 선택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 비례대표 배분의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획득하거나 유효투표의 5%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봉쇄 조항은 지나치게 높다. 2% 이상의 득표나 1석 이상을 요구하는 현재의 전국구 봉쇄조항보다 강한 이 같은 진입 장벽은 소수 세력이나 신진 세력의 정치권 진출을 원활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존 정치세력들간의 나눠먹기가 되고 말 것이다. 오히려 2% 이상을 득표했으나 지역구 의석이 없는 정당에게 우선 배분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할 때 정당명부는 권역별로 작성하더라도 배분은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지역주의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노무현 당선자가 강조하는 바람에 최근에 중대선거구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중대선거구제가 지역주의를 완화시키는 것도,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전국이나 권역을 단위로 하는 대선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지역대표성을 띠어야 할 지역구마저 중대선거구제로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 선거구획정의 민주성과 투표의 등가성 확보

헌법재판소가 2001년 10월 28일 중요한 정치개혁과제의 하나인 선거구 획정 문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의 선거구가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3대 1이 넘지 않도록 2003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유는 지금의 인구 편차 3.88 대 1이 지나치게 커서 투표의 등가성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근거로 한다. 16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의 상한선은 35만 명, 하한선은 9만 명이였다. 인구 35만 명인 선거구 유권자의 표가 갖는 가치는 인구 9만 명인 선거구 유권자의 표가 갖는 가치의 3.88분의 1밖에 안 되는 셈이다. 인구의 상한선이 30만 명, 하한선이 7만 5천 명으로 선거구간 인구 편차가 4 대 1이었던 15대 때보다는 약간 개선되었지만 투표의 등가성을 침해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지역대표성을 갖고 있고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지만 3.88 대 1은 지나치게 편차가 크다.

선거구 획정은 평등 선거의 원칙,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와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국회의원 선거구의 획정은 매우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선거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에게도 자신이 원하는 대표를 뽑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된다.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 제도에도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유권자에게 ‘1인 1표(one man, one vote)’를 인정함으로써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투표의 성과가치(成果價値)도 평등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1표의 투표 가치도 평등(one vote, one value)해야 한다.

모든 선거구의 인구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비슷해야 한다. 따라서 인구편차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면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해쳐 헌법의 근본가치 규범인 평등원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헌법질서를 거스르는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한다면 국민의 주권적 의사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투표 가치의 평등을 위해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 비례의 원칙을 가장 중요한 기본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의 보편적인 기준은 없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대체로 3 대 1 정도가 많이 나타난다. 프랑스는 인구 편차를 1.5 대 1로 하고 있다. 선거법에서 평균 인구의 상하 20% 이내의 편차만 허용하고 있다. 독일은 인구편차가 2 대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선거법에 인구편차가 상하 33.3%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대략 3 대 1을 기준으로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9 대 1은 위헌 판정을 받았고, 2.92 대 1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정을 받았던 사례가 있다. 미국도 3 대 1의 인구편차를 위헌이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영국은 인구편차가 7 대 1에서 5 대 1을 거쳐 지금은 3.88 대 1로 되어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금은 3 대 1을 위헌 결정의 근거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2 대 1 또는 그 미만으로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판결은 96년 판결보다 진일보했다. 96년에 현재는 전국 선거구 평균인구수(17만 5,460명)의 상하편차가 60%를 넘어설 경우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인구편차가 4 대 1이 된다. 당시 현재 판결에서는 인구 편차가 3 대 1을 넘으면 위헌이라는 의견이 소수의견이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3 대 1을 위헌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고 2 대 1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현행의 선거구 개정시한을 국회의원 총선거 3개월 전인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일이다. 선거법 제24조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총선거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2004년 4월에 선거가 치러지므로 선거구 개정은 선거 1년 전인 2003년 4월까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결정은 선거법 제24조를 어겨도 좋다고 권장한 셈이나 마찬가지이다.

선거구 획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선거 때마다 선거구를 획정하기 때문이다. 선거를 치르기 직전까지 이뤄진 인구 변동을 최대한 감안해야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 선거구를 자기 당에게 유리한 쪽으로 획정하기 위한 여야의 다툼이 선거구 획정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 이 과정에서 게리맨더링이 이뤄지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의 95년 결정은 “선거구의 결정은 사회적·지리적·역사적·경제적·행정적 연관성 및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 지역이 1개의 선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결정함으로써 게리맨더링을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잡음을 막기 위한 방법은 10년마다 한번씩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센서스 결과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미리 획정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 인구센서스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선거를 이미 획정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치르면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구 획정이 제 기간에 합리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이나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 지난 16대 총선에서도 국회는 선거구 획정위를 구성하지 않았다. 2000년 1월 15일에 국회에서 의결한 선거구 안은 법절차를 어기고 멋대로 결정한 것이었다. 이는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는 24조 1항을 무시한 것이다. 획정위가 구성된 것은 국민의 거센 비난 여론에 놀란 국회가 의결을 백지화한 뒤였다. 새롭게 구성된 획정위는 지역구 26석을 줄여 의원 정수를 299명에서 273명으로 줄인 안을 마련했다. 이 안을 국회는 거부하려 했다. 이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하도록 한 선거법 제24조 4항과 5항을 무시한 것이다. 물론 국민 여론 때문에 획정위 안은 국

회의결을 통과하였다.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획정위의 획정안을 국회가 무시하는 것은 획정위가 강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획정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인을 배제하고 정당 추천 인사, 학계, 시민단체, 통계전문가 등 민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 국회는 획정위의 안을 수정하지 못하고 가부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시민사회단체의 선거 운동 자유 보장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자유가 2000년 2월 9일의 선거법 개정 때 이전보다 완화시켰지만 여전히 제한적이다.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조항) 폐지와 58조(사전선거운동)의 수정을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당의 후보추천에 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현은 가능해졌지만, 선거기간에만 가능하고 방법도 제한시켰다. 예컨대 가두서명이나 장외집회가 금지됨으로써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은 여전히 불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87조는 전면 폐기하고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은 58조의 사전선거운동의 범주에서 제외해야 한다.

□ 교사 및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현재 교사 및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정당법(제6조)과 선거법(제60조 제4호)에 의해 정당 가입은 물론 일체의 정치 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이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음을 뜻한다.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헌법 제7조 1항)라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사적인 정치활동을 구별하지 않고 일반시민으로서의 사적인 생활관계에 대해서까지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 또 이는 과잉금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에 어긋나 위헌의 소지도 있다.

공무원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헌법 제7조 2항)은 공무원이 당파적이거나 사익이 아닌 공익 우선의 행정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뜻이므로 공무원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의 전부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또 교육의 중립성 보장(헌법 제31조 4항)은 교원의 정치활동을 학교 안에서의 학생에 대한 정치교육과 정치선전,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이어야 한다. 교원이 학교에서의 근무시간 내의 교육활동 이외에 개인 자격으로 하는 정치활동까지 제한해서는 안 된다.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다 인정되고 있다. 미국의 교사들은 학교운영을 방해하는 정치운동 이외에는 모든 정치활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교사의 개인적 정치활동은 학교나 학생의 교육과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간섭받지 않는다. 독일은 ‘교원의 공무원법상의 특수지위이론’의 영향으로 정당 및 정치적 결사의 가입과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프랑스는 교육공무원의 노조 가입은 물론 정당활동과 그 밖의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

영국은 공무원을 그 직무의 성격과 권한 범위, 책임 정도에 따라 정치활동의 자유의 허용 정도를 차별화하고 있다.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급공무원은 정당 가입의 자유만이 허용된다. 22%의 중급 공무원은 국회의원 입후보를 제외한 모든 정치활동이 허용된다. 40% 이상의 현업 공무원을 비롯한 하급공무원은 모든 공직의 입후보를 포함한 모든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있다.

□ 선거연령 인하

96년 4.11 총선 직전에 만 20세가 되지 않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대학 1, 2년생과 직장인 15명이 위헌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였다. 20세 미만자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선거법 15조가 헌법 1조 2항의 국민주권과 11조 1항의 평등권, 24조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97년 6월 26일에 헌법재판소는 선거법 15조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판결요지는 “만 20세 미만자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입법행위는 입법제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선거 연령을 20세로 규정한 것은 미성년자는 정치적 판단 능력이 미숙한데다 고교 재학생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입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 연령 조정 문제가 이것으로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선거 연령 20세는 18세부터 성인으로 인정하는 다른 법률과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민법에서는 18세부터 성인으로 취급한다. 18세면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고 운전 면허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또 유해한 작업장에서의 근로 자격, 병역 의무 및 현역 입대 자격 등도 18세가 되면 주어진다. 그런데 유독 참정권만 20세인 것이다.

만 20세 미만의 직장인은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 등 국민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권리, 특히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참정권의 중대한 침해가 된다. 선거가 정치적 판단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연령에 의한 제한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요건이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선거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많은 나라들이 사회적 정치적 변화에 맞추어 선거연령을 점차 낮추고 있다.

현재 만 18세를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중국 등 70여 개 나라가 넘는다. 선거연령이 가장 낮은 나라는 이란으로 16세부터 투표권을 주고 있으며 북한만 해도 17세부터 투표권을 주고 있다. 우리 나라는 48년 헌법 제정 당시 일본을 참조하여 20세로 결정했는데, 50년이 지나도록 바꾸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도 국민 정치참여의 폭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

□ 선거기탁금 조정

2001년 9월 24일 국회 법사위가 선거법을 슬그머니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국회의원 선거기탁금 2,000만원을 1,500만원으로, 기탁금 반환조건을 유효투표 총수의 20%에서 15%로 인하 조정한 것이다. 이는 2001년 7월 19일 현행 기탁금이 “돈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무시한 것이다. 그리고 선관위는 16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선거의 기탁금을 현재의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리려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문을 보면 기탁금이 왜 문제인지가 드러난다. 2,000만원 기탁금은 2000년 2월 16일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당시 1,000만원을 두 배로 올린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000만원도 과도하다고 지적하면서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기탁금을 올린 정치권을 비판하였다. 위헌 사유는 “과도한 기탁금액은 당선가능성이 있는 서민적이고 진보적인 인사들의 후보등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선거에 참여하려는 자를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하여 ‘돈이 없는 자’로 하여금 국정에 참여할 기회를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000만원을 1,500만원으로 내린 것은 1,000만원도 과도하다고 지적한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무시한 행위이다.

20%를 15%로 낮춘 기탁금 반환조건 개정도 마찬가지이다. 헌법재판소는 득표율 20%인 기탁금 반환기준이 너무 높다고 지적하였다. “기탁금 반환에 필요한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여 선거와 국정에 참여할 기회를 가로막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본질에 위배”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2-3개의 거대정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군소 정당이나 신생정당 후보자의 경우 100분의 20이라는 기준을 초과하기가 힘들게 될 것”이므로 결국 이들 군소 정당이나 신생정당의 정치참여 기회를 제약”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기탁금과 반환기준을 대폭 내리치 않는 이유를 ‘후보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후보 난립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정상적인 선거가 치러지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유권자의 관점에서 볼 때 후보가 많다는 것은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 참정권이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국정운영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주어야 한다. 정말로 후보가 난립하여 선거를 혼탁하게 한다면 선거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면 된다. 유권자들이 알아서 가장 좋은 후보를 뽑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된다. 후보 난립을 돈으로 제한하려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정작 돈으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2,000만원이 전혀 장애물이 될 게 없다. 오히려 깨끗하게 선거를 치르려는 사람들만 기탁금 때문에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기탁금과 반환기준에 국제적으로 확립된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 기탁금과 반환기준 모두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말로 필요하다면 지금보다 대폭 낮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오늘날 평균적인 직장인들이 받는 한달 치 임금 정도의 기탁금은 참정권을 제약하지 않을 것이다. 반환기준도 5% 정도로 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 등록사퇴시한의 통일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경우에 등록일까지 의원직을 유지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6개월 전에(다른 지역구에 출마하면 2개월) 사직토록 한 것은 명백히 평등을 해치는 불공정한 조항이다.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행사하면서 집단이기주의를 드러낸 이 독소조항을 고쳐 동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3. 정당제도와 정치자금제도의 개선 방향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공천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국민들은 정당이 공천한 후보들 가운데에서 선택하게 된다. 무소속 출마의 길도 있지만 우리 선거에서 무소속이 당선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당에서 공천을 잘해야 국민들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정당에서 공천을 잘못하면 국민들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포기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 정당 제도의 개혁

항 목	연 행	개정 방향
공직후보 추천 민주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대의기관 의사 반영되도록 구체적 절차 당헌에 규정	상향식 민주적 공천절차 구체적으로 규정 위반시 공직후보 공천 무효화 당선시 당선 무효, 또는 선거무효 공천무효 다룰 수 있는 소송제도 도입
당원 의무 강화	당비 납부하거나 자원봉사자에 한해 공직선거후보자 및 당직자 선거권 부여	당비납부자의 권리 제한 당비대납 금지
여성할당제	비례대표 여성 30% 이상 할당	비례대표의 당선가능권에 30% 이상 공천하도록 구체적 명시 위반시 공천무효 조항
신생정당 차별 철폐		· 정당등록 취소 조항 삭제 · 시도 분산 의무조항 삭제

□ 정치자금 제도의 개혁

깨끗한 선거와 깨끗한 정치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정치인과 공직자가 권력을 이용하여 뇌

물을 받는 권력형 비리를 없애기 위해 정치자금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정치자금법(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의 기본원칙은 검은 돈이 정치에 끼여들지 못하도록 정치자금을 실명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은 음성적 정치자금의 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야 한다.

정당의 보호 육성을 위해 국가가 정당에게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제도도 바꾸어야 한다. 국고보조금의 유용을 막기 위해 용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특히 정책개발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정책개발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 또 국고보조를 당비납부와 연계시키는 제도(matching fund)나, 납세자들에게 연말정산 때 자신의 세금 가운데 일부(예컨대 1%)를 정치자금으로 쓰는데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고, 동의하는 납세자의 세금에 해당되는 액수를 국고보조금으로 쓰는 일괄공제제도의 도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항 목	연 행	개정 방향
정지지금 수입지출투명화	회계장부 보존기간 3년 회계관련서류 열람기간 3개월	일정금액(예:5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수표사용 의무화 회계장부보존기간 기업수준(10년) 연장 선관위가 공인회계사 지정하고, 그 공인회계사가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함 수입지출관련서류 열람기간 제한규정 철폐
선거국고보조금	유권자 1인당 800원	선관위의 철저한 회계감사 의무화 보조금 지출용도 규정 구체화-정책개발비
정당후원회	연간 납입한도액을 중앙당 및 시도지부는 1억원(법인은 2억원) 지구당 후원회는 2천만원(법인은 5천만원) 기부행위제한기간에 모금할 수 없는 것에 음약회 출판기념회 추가	후원회 대상 제한 후원회 회계보고시 수입부분 내역 구체적 제시
후원회 주체 확대		창준위,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추가
처 벌		벌칙조항 강화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나 부당한 용도로 지출하지 못하도록 한 금지조항에 처벌조항 추가

4. 맺음말

21세기는 참여민주주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 지금 거의 전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은 경제권력이 너무 비대해져 경제 논리가 모든 것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적 차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광폭한 국제투기자본의 탐욕적인 움직임이다. 이 국제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참여와 자기 결정을 뿌리로 하는 참여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대체 정치란 무엇일까. 정치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일의 꿈을 주는 것이다.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설령 오늘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내일이면 아니 모레면 해결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바로 정치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 정치가 이런 구실을 하고 있는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내고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정치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인식이다.

개혁은 새로운 국가 발전을 모색하는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체제와 운영 원리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땀질식의 임시방편적 개혁이 아니라 사회 운영 원리와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무현 시대는 문민과도기인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대를 마무리짓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가게 될 것이다. 문민과도기에 사회 전반적으로 민주주의가 확대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났다. 시행착오도 있었다. 또 앞만 보고 달리던 고도경제성장의 문제점이 IMF로 나타나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국정운영에 실패한 정치는 지난날을 반성하기보다는 정파적 이해에 매달려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등 퇴행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사회 전체가 갈등과 대립에 시달리고 있으며, 생각의 차이를 근거로 상대를 증오하는 증오의 정치가 일상화되었다. 이 같은 야만과 광기의 역사를 청산하는 과제가 노무현 당선자의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통합과 조정, 올바른 인사, 국민 설득이 중요해진다.

아직 한국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현재진행형'인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다. 그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나 새로운 정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회 자신이 만든 선거법을 지키는 일이다. 지난 2000년 총선 당시 국회는 1999년 4월 13일까지 확정해야 할 선거구를 2000년 2월 9일에야 확정했다. 선거법 제24조가 강제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란 지키면 좋지만 지키지 못해도 어쩔 수 없다는 억지를 부리면서 10개월 동안이나 선거구 획정을 지연시킨 것이다. 국회가 자신이 만든 법을 무시하고 어긴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는가. 정말 이번에는 법규정을 지키면서 정치개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정치개혁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나 정당도 개혁의 대상이라고 국민들이 인식하는 상황이지만 입법권이 국회에 있으므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지만 예전처럼 개혁이 지지부진하거나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인 외에 시민단체 대표나, 학계 전문가, 언론계 대표 등을 포함시켜서 정치개혁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선거제도 토론문

김대영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성공회대

1. 정치개혁의 방향과 현시기의 초점

- 정치개혁의 방향

- 지선(至善, the best)이 아니라 차선(the better)을 찾는 과정
- 역사와 문화 속에서 공동체에 적합한 제도와 관행을 모색

- 현시기 정치개혁의 초점

- 무엇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핵심적인 문제점인가?
: 부패한 기성정치인 or 정당제도 or 선거제도
- 무엇이 지금 공론화시켜야 하는 우리 선거의 문제점인가?
: 금권선거 or 관권선거 or 규제선거 or 지역주의선거?
- 무엇이 법개정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문제인가?
: 정당명부 비례대표 or 중대선거구 or 선거규제 철폐 or ...?

2. 정당개혁의 필요성

- 민주화 이후 국민의 요구에 미흡한 한국정당의 실상: 노무현과 민주당
- 신뢰할 수 있는 공당(公黨)의 필요성
- 정강·정책에 입각한 안정적인 정책정당
- 참여형 정당체계와 당원의 주인의식
- 국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열린 정당 체계
-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치충원의 방식
- 정당간 합리적 경쟁방식과 연합방식의 정착

3. 지역주의 선거의 문제점

- 정책정당화 억제

- 무자격·무능력 정치인 양산
- 합리적 판단력을 마비
- 민주적 토론과 논쟁을 질식
- 정치의 통합력을 약화

4. 말과 인터넷을 풀자!

- 관권·금권에 대항하기 위한 기존의 규제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과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 특히 인터넷은 과도한 선거비용을 필요로 하는 기존의 언론매체와 달리 금권선거의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제하는 선거법은 개정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 문제와 한국사회의 과제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유한모임 소장

1. 다민족 공생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

대략 1988년 이후부터 한국사회로 유입되기 시작하던 이주노동자들이 법무부 추산 2002년 3월 현재 33만여 명¹⁾을 헤아리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월드컵 이후 2002년 12월 현재 3만 명 가까이 더 늘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 법무부 추산 최소한 36만여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취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한국에서 어떤 상황에서 노동하고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마스크 등을 통해 꽤 널리 알려져 있다. 하루 10-12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 저임금,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수없이 발생하는 산업재해, 장기체류를 감행하게 하는 고액의 입국수수료 및 송출수수료, 사업주에 의한 여권압류, 폭행, 성폭행, 토끼몰이식으로 이루어지는 단속과 강제출국, 국제결혼가정의 체류자격과 취업, 문화간 차이를 둘러싼 갈등, 자녀출산 및 양육과 교육의 어려움,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에서 왔다는 점만으로 감당해야 하는 한국인들의 멸시, 의료보험 등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기에 겪게 되는 갖가지 고통들, 거기에 불법체류자라는 사회적 신분에서 오는 극도의 불안정성 - 아마도 이 중 적어도 서너 가지 정도는 한국인들에게서 비교적 쉽게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이들의 인권침해와 고통의 실상이 알려져 있지 않을까 싶다.

1)

<표 1> 02년 3월 현재 외국인력 현황 (단위 : 명, %)

전체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소 계	합법근로자		산업연수생	해외투자기업연수생	
		연수취업자	전문기술인력			
336,800 (100.0)	70,952 (21.2)	10,394 (3.1)	20,564 (6.1)	27,158 (8.1)	12,836 (3.8)	265,848 (78.9)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2002. 7. 15 발표)

그리고 이들의 인권침해와 고통의 실상이 널리 알려지는 것에 비례해 이주노동자 자신들의 저항과 이들의 인권보장을 외치는 한국사회의 목소리도 높아져, 몇몇 측면에 있어서는 초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처우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연례행사처럼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목격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이 논의되곤 한다.

한편, 한국사회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저임금 노동력에 집착하며 올바른 해결책 마련을 지연시키고 있는 사이, 엄청난 숫자가 한국으로 흘러 들어왔고, 장기간 거주하는 이들이 점점 더 늘고 있으며²⁾ 아예 결혼과 출산을 통해 한 가족을 형성하면서 한국에 장기 거주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이들이 한국에 장기 거주하게 되면서, 그리고 가족을 형성하면서 이들을 둘러싼 문제들은 점점 복합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고, 그 추세는 놀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빠른 증가와 장기체류 증가현상은 역으로 한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 십 수년이 지난 지금, 한국사회는 무려 36만여 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로 인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한국사회가 어느 사이에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이제 돌이켜지지 않는(不可逆) 상황이 되어 버렸다. 아니,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출산율의 저하속도가 세계 최고인 나라'이라는 사실이나 지난달 23일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이면 노령인구가 유년인구를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어놓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경향성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사회는 이제 그저 '스쳐가던 손님' 혹은 '아주 극소수 한국인으로 귀화한 외국인'들, 혹은 '한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지만 곧 돌려보내야 할 외국인노동자'라는 정도의 인식이 아니라, 한국사회를 떠받치는 젊은 노동력집단으로서 이주노동자들을 바라보고 이들 존재를 한국사회내에서 올바르게 자리매김할 방안, 그리고 어떻게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 될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공론화가 필요한 상황이 도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예측은 한국사회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단일한 혈통을 가진 단일 민족이라는 한국민족의 정체성과 단일한 문화권, 단일한 언어를 구사하는 한국문화라는 기존의 개념에 대해, 새로운 개념의 민족, 다문화, 다언어의 공존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역사적으로 다른 민족과 사이 좋게 살아온 집단적 경험이 별로 없는 사회이고 민족들이다. 오히려 타민족으로부터 침략과 피해를 받은 집단적 경험과 사회적 학습을 압도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회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인식의 개선 등이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특히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덜 개발된 국

가에서 온 타민족과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문화는 물론, 사회 제도면에서도 한국사회는 매우 미숙한 상태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사회가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든 아니든, 아니 좋든 싫든, 객관적 흐름은 이미 한국사회가 여러 민족이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하여, 이하에서는 비록 늦었지만 한국사회가 이미 진입해 가고 있는 "다민족 공생사회(多民族共生社會)"로의 안착을 위한 한국 사회의 준비는 과연 어떠한지 하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서술하고자 한다.

2. 합리적인 외국인력제도 마련이 "다민족공생사회"를 위한 첫 걸음이다.

현재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의 근간은 산업연수제이다. 1991년 해외투자기업연수제 실시로 시작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는 1994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협")를 도입 창구로 하여 수만명씩 대규모로 외국인력을 도입하게 되면서 편법적인 외국인력 도입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산업연수생제의 문제점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외국인력을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으로 노동시키는 것'이다. 이들은 합법체류자임에도 미등록이주노동자(통칭 불법체류자)보다 오히려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하고 있다. 임금, 근로시간, 산업재해, 인권보호, 거기에 고액의 송출수수료를 갚기에는 너무 짧은 2년-3년의 노동기간동안 어느 모로 보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보다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점 때문에 중기협 산업연수생들의 20% 이상이, 해외 투자기업연수생들의 55.5%가 해마다 사업장을 이탈하여 스스로 미등록노동자 신분을 택하고 있다. 거기에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사업장의 외국인력 수요로 인해 미등록 노동자는 해마다 늘어가 전체 이주노동자의 78.9%가 미등록노동자라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불법이 합법이 압도하는 전도된' 현상을 빚었다.

이들은 하루 평균 10-12시간의 장시간 노동, 다발하는 산업재해, 월 70-80여만원의 임금을 받고 한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한국인이 기피하는 지역에서, 한국인이 기피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도맡아 하고 있다. 최소한 두세 번씩은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안전장치, 안전장비도 없는 작업현장에서 수없이 죽어나가고 신체가 훼손당하고 있다. 변변한 건강진단 한번 받아보지 못해 작은 병을 키우기 일쑤이다.

그럼에도 이들, 중기협 연수생, 해외투자기업연수생, 그리고 미등록노동자 36만여 명은 한국의 잘못된 제도로 인해 '노동자가 아니거나 불법노동자'로 대우받는 신세이다. 정상적인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에 이들은 한국의 노동관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일부 조항 적용대상이거나 혹은 실질적인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들의 신분적 불안정성은 이들이 작업현장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아도 한국의 법과 제도에 권리구제를 요청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 이런 제도적 약점을 많은 사업주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점들은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어 노동법의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상당부분 해

2) 2002년 12월 31일자 법무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이주노동자들 중 14만9천여명이 3년이상 체류자라고 한다. 비율로 58%정도인데 실제로 일선에서 상당하다보면 5년이상 체류자도 부지기수였다. 7년, 8년 심지어 13년간 체류한 이들도 있었다.

소 혹은 경감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노동법이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산업연수제를 철폐하고, 노동허가/고용허가제를 실시하면서, 미등록노동자들을 양성화하여야 한다. 그것이 이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한국 사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작업이다.

3. 다양성의 존중 - 다민족 공생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1)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시급하다.

다민족 공생사회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다. 우리는 한국 문화의 특징으로 '뿌리 깊은 우리의식' '패거리문화' '연고문화' '인맥중시' 문화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동종의 부류에 속하지 않는 타인에게 배타적으로 작용하고 심하게는 폭력적으로까지 나타나기도 하는 이런 류의 문화는 다민족 공생사회를 위해 첫 번째로 지양해야 할 문화이다. 나아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군사주의적 성향을 띤 문화, 권위주의적 문화 역시 지양해야 할 문화이다. 군사주의적 문화와 권위주의적 문화는 강자에의 복종과 함께 약자에 대한 억압을 동시에 낳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억제한다. 이런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징들을 지양해 나가는 과정은 우리 사회의 진보적 지향점과 궤를 같이 한다.

또한 민족주의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고 식민지가 되는 과정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또한 식민지 해방이후 좌우 이념대립과 동족 상잔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민족주의적인 가치가 사회 내에서 우선적인 가치로 자리잡게 되었고 또한 일반인들 사이에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이른바 "단일민족사상"이 뿌리깊게 자리잡게 되었다.

민족주의적 가치는 피지배자나 피해자, 약자의 입장에서는 "선"이 될 수도 있지만, 지배자나 가해자, 강자의 입장에 서는 민족주의는 파시즘, 인종주의 등과 결합하면서, 엄청난 사회적 "악"을 배태하기 쉽다. 이 점은 나찌 등 파시스트의 역사적 폐해를 생각하면 쉽게 확인된다고 하겠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서나, 해외투자기업의 현지 사회와의 관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민족주의적 의식이나 태도의 부정적 측면을 비판적으로 점검, 확인하면서, 단일민족주의 등을 기초로 짜여진 우리 사회의 문화적 토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한편, 조선족이나 고려인 등 재외동포 이주노동자들을 일반적 이주노동자들보다 우대해야 한다거나, 또는 재외동포 이주노동자 문제만이라도 우선 해결하자는 식의 주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재외동포 이주노동자나 일반적 이주노동자이건 간에 민족이나 언어 문제 등을 빼고는 외국 국적을 가진 이주노동자란 점은 똑 같다. 따라서 어느 한쪽 문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할 때는 모두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향을 잡는 것이 맞다. 다만 조선족이나 고려인 등이 재외동포법의 차별적 적용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따라서 이들

문제를 재외동포법의 올바른 개정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2) 약자, 소수자집단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권리옹호정책 및 우대정책을 세워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놓여있는 사회계층이라 볼 수 있다. 비정규노동자(불안정, 불안전 노동자)계층 중의 최하위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사회의 민주화 정도나 문화적 성숙도의 척도는 그 사회가 약자, 소수자에 대해 과연 어느 정도의 권리옹호 정책이나 우대정책을 실현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한국 사회는 경제규모 세계 12-13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고, 또 OECD에도 가입한 국가답지 않게 형편없는 최하위 수준에 불과하다고 봄이 객관적인 평가일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동등한 권리보장은 물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약자, 소수자 계층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실천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미 많은 인권선진국에서 약자, 소수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실시해 온 역사적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만, 불행하게도 아직 우리 사회에는 이런 역사적 경험이 제대로 소개되어 있지 않고 또한 그 성과가 공유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이주노동자 등 소수민족에 대한 제도적 우대 정책에 대한 사회적 전망조차 부재한 실정으로 판단된다. 이 점은 일반 사회나 여론 주도층은 물론이고, 인권운동 진영에서조차 이 개념이 아직 미정립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한다.

관심 있는 연구자들과 인권활동가들이 인권선진국들의 소수민족 우대정책 등 약자, 소수자 우대정책을 연구,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맞는 이주노동자 등 소수민족 우대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사회적 논의가 신속하게 조직될 긴박한 필요성이 있다.

(3) 사회적 시스템의 마련과 준비가 필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당면하는 갖가지의 인권침해 및 애로사항들은 가히 총체적이다. 그러나 합법적 제도의 이점을 적절하게 지원 받지 못하는 이들이 인권침해를 겪거나 애로사항들이 발생하였을 때, 많은 경우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을 통해 그 해결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잘못된 외국인력제도의 개선투쟁을 위시하여,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 귀국과 관련한 문제, 질병과 치료의 문제, 국제결혼과 자녀출산, 양육, 교육의 문제, 사망과 장례의 문제 등,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에서 개입하고 있다.

정상적으로라면, 적어도 한국에 외국인력이 '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제도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던 1994년경부터는 한국사회나 한국정부가 전면적으로 나서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사회적, 정부적 차원의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정부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일체 거치지 않은 채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이름의 편법적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을 대거 도입하는 무모한 정책을

감행하고 말았는데, 그 정책적 무모함은 산업기술연수생을 도입한지 채 10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에 한국내 이주노동자 숫자가 약 30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증가하였다는 역사적 통계만으로도 쉽게 확인되고 있다. 아무런 사회적 대비체계를 만들지 못한 상태로 경과된 지난 10여 년 동안은 물론, 지금 현재도 여전히 한국사회는 이에 대한 사회적 대비를 철저히 게을리 하고 있다. 그 결과 '상품'이 아닌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36만여 명의 노동자이자 주민들로부터 발생하는 총체적인 문제들을 정부가 아닌 전국 50여 군데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과 몇몇 선량한 한국인들이 떠안게 되는 기형적인 현실이 초래되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나날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을 지원하는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의 업무량은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에서는 각종 한국사회의 시스템이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회제도적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상품'이 아닌 '사람'으로서 한국에 들어와 생활하고 노동하고 있는 이들이 한국 사회 내에서 사람으로서 겪게 되는 실로 갖가지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한국사회의 제반 제도적 시스템을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또 필요하다면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도 하여야 한다.

우선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

노동자로서 이들이 산업현장에서 겪는 각종 권리침해를 구제하는 임무를 맡은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법원 등의 기관에서 이주노동자들도 쉽게 권리보장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들,

경찰, 검찰 등에서의 수사과정, 법원에서의 재판과정, 수용시설에의 수용과정과 생활 등등에서 문화와 언어가 다른 이주노동자들이 쉽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

생활인으로서 이들이 병원, 은행 등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조치들, 또 사회보장 서비스 등 제반 공적 지원제도 활용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들,

자녀의 양육과 교육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이나 기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따른 제반 애로사항을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조치들,

소수민족으로서 고유의 종교나 문화 생활을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치들, 이주자로서 한국사회나 지역사회의 구성원들과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이를 지속시키게 하는 조치들,

이주자로서 한국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한 조치들, 등이 필요할 것이다.

"네팔인 여성 찬드라는 92년초 한국에 와서 일하던 중 92년 0월 0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된 후 2000년 4월에야 정신병환자가 아닌 것이 밝혀져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다. 92년 당시,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켜먹고 돈을 지불하려다가 지갑을 분실한 것을 알고 주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으나 그의 말을 못 알아들은 주인이 무전취식이라며 경찰서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가 행색이 초라하고 한국어를 못하는 것을 보고 정신질환자라고 잘못 판단하여 청량리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7년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 찬드라가 실종된 후 네팔인 공동체에서 경찰에 실종신고를 내기도 하였으며, 청량리 정신병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경찰측에 '네팔인인 듯 하다'는 통지를 보내었으나 경찰은 이를 무시하였다. 찬드라는 정신병원에 있는 내내 본인은 한국인이 아니고 네팔인이며 정신질환자가 아니라고 줄곧 주장하였으나 그의 말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찬드라가 정신병원에서 나온 이후 부친 외국인노동자의 집에서 찬드라를 대신하여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었고 법원에서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백서에서 인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발간, 2001)"

"스리랑카인 00은 길을 가다가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그런데 경찰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과실로 처리되었고 이로 인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였다. 이 사실을 안 상담지원단체에서 경찰을 찾아가 항의하였고 그 결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2002년 사례)

"러시아인 알리는 부인과 함께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한 한국인이 다가와 취업에 관한 얘기를 꺼냈다. 그런데 그가 알리 부인의 손을 만지면서 '예쁘다'는 등의 말로 희롱하였고 이에 알리가 항의하면서 서로 다툼이 벌어졌다. 다툼이 커지면서 소란이 일자 불법체류자였던 알리는 도망을 갔고 그러자 그 한국인은 맥주병을 깨뜨려서 들고 알리를 쫓아가 알리의 뒤통수를 가격했다. 그로 인해 알리는 전치 6주의 창처를 입었다. 알리는 그 한국인에게 치료비와 두 달간의 임금을 지불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가해 한국인은 오히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면서 알리를 경찰에 고소하였다. 알리는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했다. 경찰에 출석한 알리를 조사하던 경찰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자 한국어를 웬만큼 하는 몽골인을 불러서 통역을 시켰다. 정식 통역원을 사용하지 않은 진술은 명백히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진술은 유효한 것으로 되었고 피해자였던 알리는 쌍방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되고 말았다."(포천나눔의 집, 2002년 사례)

(4) 사회 각 영역에서 다민족,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가) 의식의 전환이 필요

무엇보다 먼저 이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한국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인식을 드러내 보면 대개 다음과 같은

정도일 것이다.

“못사는 나라에서 온 불쌍한 사람들” 혹은 “질병이나 범죄, 마약 등으로 기피해야 하는 집단3)” 혹은 “한국인들은 그러하지 않는다”라거나 “한국인도 힘든데 외국인까지 도와주어야 하는가” “자기네 나라에서 받는 월급을 생각하면 이 정도면 아주 괜찮은 거다”라는 등.

특히, 일선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이주노동자들의 이성교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사생활에 관한 영역임에도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이주노동자들의 이성교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접촉하다보면 열에 여섯일곱은 사생활을 들추면서 매도하기 일쑤다.

남성이주노동자나 여성이주노동자 할 것 없이 이성교제 혹은 동거 등에 대해 똑같이 비판적인데, 남성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여성과 교제하는 데에 대해 특히 한국인남성들이 격렬하다고 할 정도의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남성이주노동자가 아프리카대륙에서 온 흑인일 경우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거기에 남성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여성과 결혼하고자 할 경우 한국인여성의 집안에서 보이는 반응은 더욱 배타적이다.

한국인여성과 결혼하는 남성이주노동자들은 예외없이 배우자의 집안에서 냉대를 받는다.

이런 사고들은 모두 이들을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 시각에서 나온다.

이들에 대한 우월감에서 배태되는 시혜적 의식, 근거없이 불온한 집단으로 보는 시각, 차별적 시각, 배타적 시각 등은 모두 이들을 동등한 인간으로 이해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한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AIDS 걸린 줄 알아요. 한국 TV에서 아프리카 AIDS 많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피해요.” [말리, 남성, 28세, 미등록노동자]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노동자실태조사에서 인용)

3) 2001년 경찰백서에 의하면 2001년 한국인의 총범죄는 1,860,687건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 외국인의 총 범죄는 1,745건에 2,607명이다. 이를 인구비례와 비교해 보면 대략 약 1/8 수준에 불과하다.

	건수	인구	범죄 1건당 인구수
내국인	1,860,687	4500만	약 24명당 1건
외국인	1,745	33만	약 189명당 1건

외국인범죄처리 현황 (단위: 명)

연도	구속	불구속	이첩	기타
98	397	649	118	112
99	522	941	88	91
00	594	1100	144	202
01	762	1478	129	238

자료: 2001년 경찰 백서

“불법체류자들의 퇴직금까지 받아주어야 하느냐. 중소기업주들은 모두 애국자다. 당신네들같은 단체가 불법체류자를 양산한다.”(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에서 체불임금으로 접촉한 서울지역의 모 노동부지방사무소 근로감독관의 반응)

“오갈 데 없어서 불쌍해서 내가 먹고 자게 해주었다. 그런데 월급 좀 밀렸다고 인권단체를 찾아가갈 수 있느냐. 지가 뭔데 그런 데를 찾아가느냐”(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에서 체불임금으로 접촉한 모 사업주의 반응)

“한국 여자 친구 생기면 문제 생겨요. 한국 사람들 화내요. 까만 사람이 한국 여자랑 얘기하면 욕해요.” [말리, 남성, 28세, 미등록노동자]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노동자실태조사에서 인용)

“00은 토요일만 되면 이태원의 나이트클럽에 가서 한국여자들을 꼬신다. 여자를 수시로 바꾼다. 한국여자만 보면 게걸스럽게 침을 흘린다. 00의 말에 의하면 한국여자들이 외국남자들이 심볼이 커서 좋아한다더라. 그런 놈들한테 넘어가는 여자들도 문제다.”(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에서 체불임금으로 접촉한 모 사업주의 반응)

“불쌍해서 부부를 채용했다. 그 부부와 다른 몽골인을 한 방에 기거하게 했다. 둘이서 다른 사람이 있건 말건 밤이면 그것을 한다. 같이 사는 몽골인이 못살겠다고 하더라. 그런 애들이다. 나 이도 어린 것들이....”(부부임을 알고 채용했으면서도 부부생활을 위해서는 조금도 배려하지 않았고 부부의 임금을 체불했던 모 사업주의 반응 -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상담 사례)

“한국인 아내하고 결혼한지 2년 반이 지났다. 근 2년동안 아내 집안에서 나를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았다. 지금은 괜찮아져서 파키스탄으로 아내하고 같이 가서 이슬람식으로 혼인하고 오려고 한다.” [말리, 남성, 31세, 미등록노동자]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상담사례)

나) 이웃으로서 이들을 받아들여야

최근에 실시된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의하면 설문에 응답한 733명의 이주노동자 중에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식당이나 가게에서 의심받거나 불친절한 대우를 받은 경험을 한 사례가 19.9%, 식당이나 가게에서 한국인에게 이유없이 무시당하거나 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는 사례가 18.9%였다. 이들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인들이 불편한 감정을 행동이나 표정으로 표시하거나 또는 어떤 경우는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조롱하기도 하고 아예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앉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러한 태도가 시정되기 위해서는, 거주민이나 생활인으로서의 이주노동자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의식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원활한 의사소통,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주민으로서의 상호 친밀감을 고

양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안산, 부천 등지에서 이주노동자 지원센터와 함께 이루어지는 지역 차원의 행사⁴⁾나 지역주민들과 일상적으로 함께 하는 활동⁵⁾들은 다민족공생사회를 위한 나름대로의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버스나 지하철 타면 한국사람들이 피해요. 옆에 자리가 있어도 한국 사람들 안 앉아요. 오산 가는 1번 버스 탔을 때 버스 기사가 “내려” 그랬어요. 못 타게 해요. 냄새난다고 못 타게 해요. 어떤 버스는 기사 뒷자리에 앉으면 다른 자리로 가래요. 냄새난다고. 어떤 버스 기사는 향수 같은 거 나한테 뿌렸어요.” [말리, 남성, 28세, 미등록노동자]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노동자실태조사에서 인용)

“한국 사람들 까만 사람 싫어해요. 가난해서 한국 왔다고 싫어해요. 한국 TV에 보면 옛날 아프리카 사람들 사는 모습만 나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아프리카 AIDS,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말리, 남성, 28세, 미등록노동자]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노동자실태조사에서 인용)

“예를 들면, 우리들을 부를 때 강아지를 부르듯 손짓하며 입술로 혀를 차는 소리를 냈었다. O 사장은 앞에서 ‘너는 동물이다’라고 영어로 말했다. 동물에 해당하는 animal 단어 발음이 영어와 불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통역하지 않아도 알아들었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말했기 때문에 매우 불쾌했었다. 같이 일하는 식당 아줌마는 OO가 다가오면 코를 막으면서 ‘냄새난다’고 했다. 한 번은 바로 앞에서 컵을 집어던지며 냄새나니까 나가라고 했었다.” [코트디부아르, 남성, 39세, 미등록노동자]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노동자실태조사에서 인용)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자꾸 쳐다봅니다. 길을 걸을 때도 신기한 듯이 쳐다봅니다. 요즘에는 많이 심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저를 피해서 지하철 옆 칸으로 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버스 운전 기사 아저씨들은 막 화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가나, 남성, 29세, 미등록노동자]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노동자실태조사에서 인용)

다) 민주주의와 합리적 사고를 배양할 수 있는 교육 필요

잘못된 법과 제도는 그나마 고치면 된다는 해결방안을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 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 이들을 이방인이 아닌 이웃의 주민으로 인정하고

4) 경기도 부천에서는 해마다 '우리도 부천을 사랑해요'라는 이름으로 부천외국인노동자센터의 지원을 받아 네팔, 미얀마 공동체의 행사가 행해지고 있고, 안산에서는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의 지원을 받아 '거리축제'라는 이름으로 각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음식과 문화를 선보이는 행사가 행해지고 있다.

5) 안산에서는 1주일에 한번씩 지역주민들과 이주노동자들이 거리 청소를 함께 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여름 수해가 났을 때 수해지역에 복구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다.

우리와 다른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왕도가 따로 없다. 상대를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합리적 사고를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더욱 중요하다. 이들에게 이주노동자들은 성인들이 받아들여듯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끼어 들어오는 그런 낯선 존재들이 아니다. 이미 수많은 국제결혼 가정이 존재하고 있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가족을 동반하면서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들까지도 한국에 거주하는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 중 학령기에 다다른 아이들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아직 편견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고착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이들과 소통하고 공존하는 원리를 교육시키는 것은 다민족 공생사회를 위해 특별히 중요하다.

“칸과 산, 알리 세 사람은 1999년 12월부터 경기도 소재 OO금속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0년 8월 칸과 일하던 관리자 사이에 업무상의 일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런데 관리자는 말다툼중에 칸의 코를 때리고 폭행을 하였다. 폭행을 당한 칸과 산, 알리는 무서워서 회사를 바로 뛰쳐나왔다. 세 사람이 회사를 나가는 것을 본 사업주는 월급을 받지 않으려면 나가라고 했고, 관리자의 폭행으로 겁에 질린 칸은 한시라도 빨리 회사를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월급은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바로 회사를 나갔다. 일단 위협적인 상황을 벗어난 칸은 이후 상담소를 찾아왔다. 상담소에서 OO금속과 접촉해보았다. 그러나 사업주는 심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칸과 함께 회사로 방문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사업주의 요구로 상담원이 칸과 함께 회사를 방문하자 사업주는 상관 말을 듣지 않으면 맞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또다시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백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발간, 2001)”

라) 다문화 이해를 위한 적극적 관심 필요

2002년 국정감사에 제출된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이주노동자의 국적은 무려 96개국⁶⁾에 달한다. 이처럼 많은 다국적인들을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일일이 세심하게 배려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적어도 한국민과는 다른 이들의 의식이나 문화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과 함께, 민족이나 국적이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의식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그 동안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지구촌에 대한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촉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체류자격별 불법체류자 현황> 단위 : 명, %